



주간통일정세 2011-52(2011.12.19 ~ 12.25)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5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先軍통치' 김정일 이틀 전 열차내서 급사(12/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7일 오전 8시30분 급병으로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19일 일제히 보도
- 북한 매체는 '전체 당원과 인민군 장병과 인민에게 고함'이란 제목의 발표문에서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100(2011)년 12월17일 8시30분에 현지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했다"고 밝힘.
- 이 발표문은 "우리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따라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오늘의 난국을 이겨내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하여 더욱 역세게 투쟁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앞으로 권력공백을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막아 나갈 것임을 시사
-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내각 공동명의로 발표문을 발표
-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의 질병과 서거원인에 대한 의학적 결론서'에서 "17일 달리는 야전열차 안에서 중증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심한 심장성 쇼크가 합병됐다"며 "발병 즉시 모든 구급치료대책을 세웠으나 17일 8시30분에 서거하셨다"고 밝히면서 "18일에 진행된 병리해부검사에서 질병의 진단이 완전히 확정됐다"고 전함.
- 북한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을 포함해 232명으로 장의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북한 매체는 김정은의 이름을 제일 먼저 호명해 사실상 위원장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
-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장의위원회 공보' 제목의 보도를 통해 오는 29일 까지를 애도기간으로 한다며 외국의 조의대표단은 받지 않기로 했다고 전함.
-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시신을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하고, 17일부터 29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하며 20~27일 사이에 조객을 맞는다"며 "28일 평양에서 영결식을 거행한다"고 알림.
- 이어 통신은 "김 위원장을 추모하는 중앙추도대회를 29일 연다"며 "중앙추도대회가 거행되는 시각에 평양과 각 도 소재지에서 조포를 쏘며 전체 인민이 3분 동안 묵도를 하고 모든 기관차와 선박이 일제히 고동을 울린다"고 전함.



● 장의위원 면면 보니 '黨 중심'(12/19, 연합뉴스)

-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 체제는 '당의 국가 영도' 강화를 통한 후계자 김정은의 권력 강화로 나타날 전망이다라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전문가들은 북한 조선중앙TV가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실과 함께 발표한 국가장의위원회 명단 232명의 면면을 들어 "국가에 대한 당의 영도 강화 등을 통해 김정은의 영도체제가 일단 안정적으로 구축된 것 같다"고 분석
- 장의위 명단에는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필두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리영호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정치국 상무위원과 김영춘,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김경희 등 정치국위원 7명, 김양건, 장성택 등 정치국 후보위원 14명이 올라옴.
- 북한 출신인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도 이런 전망에 동조했으며, 홍 위원장은 "김정은이 장례식 후 권력을 한층 강화해 순조로운 승계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다른 권력기관들도 체제안정을 위해 정통성 있는 후계자 김정은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
- 홍 위원장은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와 고모부인 장성택 부부는 각각 14번째와 19번째로 이름이 올랐지만 향후 김정은을 총력 지원하면서 권력서열이 앞당겨지고 측근인 최룡해 당비서 등도 한층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
- 장성택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들로 작년 9·28 당대표자회에서 중앙정치 무대에 진입한 최룡해 당비서와 리영수 당 부장,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지재룡 주중 대사도 장의위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최덕신 전 외무장관의 부인으로 미국 이민 10년째인 1986년 남편과 함께 월북한 류미영 천도교천우당 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은 232명 중 마지막으로 이름이 올라옴.
- 정치국 위원 중 올 3월과 6월에 각각 해임된 것으로 북한매체들에 보도된 주상성 전 인민보안부장과 홍석형 전 당비서는 명단에서 빠졌으나, 비리 혐의 또는 신병으로 옷을 벗은 것으로 우리 당국이 전했던 리태남 전 부총리는 포함

● 北 '영도자는 김정은' 선언(12/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 위원장의 사망을 발표하면서 김정은을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계승자' 등으로 표현해 김 위원장의 후계자임을 알림.
- 중앙통신은 이 글에서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 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탁월한 영도자이신 김



정은 동지께서 서 계신다"며 "김정은 동지의 영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 수 있는 결정적 담보가 된다"고 주장

- 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은 국가장의위원회 구성 소식을 전할 때도 김정은을 '김정은 동지'라고 첫번째로 호명함으로써 후계자임을 분명히 함.
- 북한이 이처럼 김정은을 띄우는 것은 김 위원장 사망에 따른 권력과 민심의 우려와 혼란을 막고 내부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이며, 북한은 김 위원장 사망 후에도 선군사상과 사회주의를 고수할 것이라고 밝힘.

● 北 김정일 시신 공개…김정은 조의(12/20,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TV는 20일 오후 3시께 평양 금수산기념궁전 유리관 속에 안치된 김 위원장의 시신 모습을 방영
- 북한은 김 위원장의 시신을 방부처리해 김 주석처럼 금수산기념궁전에 영구보존할 것으로 보이며, 화면에 비친 김 위원장의 시신은 붉은 천으로 가슴까지 덮여 있었고, 김 위원장이 평소 즐겨 입던 인민복 차림이었음.
- 또 북한의 새 영도자에 오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의 영전에 공식 조의를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 자리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리영호 당군사위 부위원장 등 정치국 상무위원과 김영춘,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김경희 등 정치국위원, 김양건과 장성택 등 정치국 후보위원이 동행

● 김정은 대대적 찬양·선전(12/20,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발표 이틀째인 20일 북한 언론매체들은 '존경하는'이라는 존칭적 수식어를 일제히 붙이는 등의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찬양·선전을 대대적으로 벌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심지어 김일성 주석과 김 위원장에게만 사용했던 '결출한 사상이론가' '탁월한 영도자' '천출위인' '불세출의 선군영장' 같은 찬양성 호칭도 쏟아냈는데, 이들 호칭은 김 주석에게 사용된 호칭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도 김 주석의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10여년이 지난 1980년대 중반에야 사용된 것들이라고 뉴스는 전함.
- 북한 매체들은 이날 김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의 빈소에 조의를 표한 사실을 전하면서 김 부위원장의 이름 앞에 "위대한 장군님의 가장 친



근한 혁명동지이시며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탁월한 영도자"라는 긴 수식어를 붙였으며, 이런 식의 긴 수식어 역시 김 주석이나 김 위원장에게만 사용

-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각지 주민들의 슬픔을 부각하면서 전 사회적으로 김 부위원장에 대한 대(代) 이은 충성 분위기를 유도 하는 표현들을 사용

● **北, 김정일 사망 발표 전 '김정은 명령1호' 하달(12/21, 연합뉴스)**

-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전에 전군에 '김정은 대장 명령 1호'를 하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21일 "김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전 전군에 '김정은 대장 명령 1호'를 하달했다"면서 "이는 김정은이 군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밝힘.
- '김정은 대장 명령 1호'는 전군에 훈련을 중지하고 즉각 소속부대로 복귀하라는 내용이라고 소식통은 전함.
- 이는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인민군에 처음으로 내린 명령으로, 그가 곧 인민군 최고사령관 직위에 오를 것을 암시한다고 소식통은 덧붙임.

● **김정은, 조문객 맞으며 '최고지도자' 과시(12/21,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발표 사흘째를 맞은 21일 북한은 각계의 추모 분위기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충성맹세'로 연결하는 데 주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전날 당·정·군 고위간부들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김 위원장 영전에 참배했던 김 부위원장은 이날 장의위원장 겸 상주로서 빈소를 계속 지키며 국내외 조문객을 맞았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함.
- 김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영구를 지키면서 조문객인 각국 외교단, 재외동포 대표 등을 접견하고 일일이 악수를 하는 등 북한의 새 지도자임을 대내외에 과시했으며, 해외 인사들이 김 부위원장에게 보낸 조전에는 '각하'라는 표현도 등장

● **北 "김정은 영도 따를 것" 강조(12/21, 조선중앙TV; 노동신문)**

-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의 주요 매체들은 이날 장송곡, '김정일 장군의 노래' 등과 함께 전날 이뤄진 김정은 부위원장의 시신 참배 소식, 북한 전역에서 이뤄지는 조문 활동 등을 반복 보도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영도를 따를 것이라고 강조



- 중앙TV는 "장군님의 심장은 고동을 멈췄지만 21세기는 영광스러운 김정일 세기로 빛날 것"이라며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받들어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높이 경공업 제품의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가겠다"는 김병호 내각 경공업성 국장의 인터뷰를 내 보냄.
-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한 태양' 제목의 보도에서 "자애로운 아버지,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이었다"고 김 위원장을 칭송하며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앞길을 찬란한 영도의 빛발로 환히 밝혀주고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업을 승리로 이끌어준다"고 찬양

● "사망소식 전후 신기한 자연현상"(12/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 위원장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19일을 전후해 백두산 천지와 정일봉 상공, 김 위원장 동상 주변 등에서 '특이한 현상'들이 잇따라 관측됐다고 전하면서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신격화하는 데 백두산 광음, 노을, 백학 등 각종 자연현상을 동원
- 통신에 따르면 우선 17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얼음이 천지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지는 현상이 관측됐으며, 장군봉 능선에서도 나타난 이런 현상은 관측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통신은 주장

● "김정은 10월부터 국정운영...지도소조 출범"(12/22, 오늘의북한소식)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0월부터 내부적으로 국정운영을 맡아 시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사)좋은벗들이 22일 전함.
- 좋은벗들이 운영하는 북한연구소는 이날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에서 북한이 올해 김 부위원장으로의 세대교체를 마무리했으며, 김 부위원장은 지난 10월10일 당창건일부터 비공개적이지만 정식으로 국정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힘.
- 소식지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전력부족 최우선 해결, 전 공장 가동으로 인민생활용품 2~3년 내 정상공급, 각종 반북단체 및 탈북자 연계세력 색출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 등을 지시
- 또 식량을 평양과 회령, 국가기관과 지방간부들, 법기관과 군부대에 최우선으로 무조건 공급하고, 2013년까지 중국산 등 외국상품을 시장에서 줄이고 국산품 공급을 늘리는 한편 농민시장 외 모든 시장을 없애도록 지시
- 북한이 올 하반기에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수출을 금지했는데 이것도 '전력확보 최우선'이라는 김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는 대중국 석탄수출이 전면 금지된다고 소식지는 밝힘.

● "김정일, 평양교외 별장 집무실서 사망"〈日방송〉(12/22, 연합뉴스)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열차 안에서가 아니라 평양 교외의 별장 집무실에서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일본의 아사히TV가 22일 보도
- 이 방송은 북한과 중국 사정에 밝은 소식통이 17일 오전 1시쯤 김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약 40km 떨어진 별장의 집무실에서 의식불명의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함.
- 아사히TV는 탈북자인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의 경우 김 국방위원장이 16일 밤 8시쯤 심장 발작을 일으켜 열차가 아닌 평양의 관저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 北 "이틀간 연 4천392만명 조의"(12/23, 노동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발표된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연 4천 392만여 명이 북한 전역에서 조의를 표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3일 보도
- 노동신문은 "19일 낮 12시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 전국적으로 연 4천 392만9천여 명이 평양과 각지에 마련된 조의식장을 찾아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밝힘.

● 北,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시사(12/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우리의 최고사령관'이라는 장문의 정론에서 "우리는 심장으로 선언한다"며 "김정은 동지를 우리의 최고사령관으로, 우리의 장군으로 높이 부르며 선군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것"이라고 밝힘.
-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시여, 인민이 드리는 우리 최고사령관 동지의 그 부름을 안으시고 김일성 조선을 영원한 승리로 이끄시라"고 강조해 김 부위원장의 최고사령관직 승계가 추대형식을 통해 이뤄질 것임을 시사

● 北장성택 대장군복차림 등장...군부집단지도 시사(12/25,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대장 군복을 입고 등장해 김정은 체제가 군부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될 것임을 내비쳤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조선중앙TV는 25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는 장면을 전하면서 대장 계급장을 단 군복 차림의 장 부위원장의 모습을 방영
- 특히 장 부위원장은 김 부위원장의 우측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바로 옆에 서 권력서열이 급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연합뉴스



가 전함.

- 이에 따라 북한은 김 부위원장을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고 나서 장 부위원장과 군부 고위인사들을 축으로 하는 군부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해 비상상황을 돌파해 나갈 것으로 관측되며, 참배에는 당 중앙 군사위, 국방위, 군 최고사령부 등의 군 고위간부가 김 부위원장을 수행해 이들이 북한 당국의 국정운영에서 중심축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16일 오후 9시13분에도 생존"(12/25, 노동신문; 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자 정론에서 "(16일) 밤이 깊어가는 21시13분, 바로 그 시각 한 일군은 장군님께서 수표(서명)하신 하나의 문건을 받아안았다"며 "양력설을 맞이하는 평양시민들에게 청어와 명태를 공급할 데 대한 문제를 료해(피약)하시고 결론을 주신 문건이었다"고 공개
- 노동신문은 "그이(김정은)께서는 한 통의 문건으로 모든 것을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진정한 동지가 되자는 말씀,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는 충복이 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자는 뜨거운 말씀이 전류와도 같이 일군들 모두의 심장 속에 흘러들고 있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이 건강상태가 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 직전까지도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업무에 몰두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지만, 결재시간을 분단위까지 공개한 것에는 '16일 사망설' 등을 일축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유훈통치'가 김 위원장 사망 직후부터 시작됐다는 점도 시사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김정일 사망 관련 동향

- 北, 김정일 사망 소식을 특별보도 형식으로 발표(12/19, 중통·중·평방·중앙TV)
 - 12.17, 08:30 현지지도의 길에 중증급성심근경색과 심한 심장성 쇼크 합병으로 열차 안에서 사망
 - 애도기간을 12.17~29까지 13일간 진행하며, 조문기간은 12.20~27까지 8일간 진행
 - 또한 영결식은 12.28 평양에서 진행 및 중앙추도대회는 12.29 진행
- '김정일 영전'에 조의표시 의식, 12.20 김정은 및 黨과 국가·무력기관 책임일꾼 등 참가下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진행(12/20, 중·평방·중통)
- 김영남, 최영림, 리영호, 김경희, 김영춘,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리용무, 오극렬, 강석주, 변영립, 장성택, 김정각, 김양건, 김영일, 박도춘, 최룡해, 김락희,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우동측, 김창섭 등 참석
- 김정은 및 黨과 국가·무력기관 책임일꾼들, 12.20 '김정일 영구'에 애도 표시(12/20, 중통·중·평방)
- 김정은과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이 護喪을 서고 있는 가운데 금수산기념궁전 '김정일 영전'에 北 체류 해외동포들과 駐北 各國 외교대표·국제기구대표들 및 무관단이 12.20 '조의 표시'(12/21, 중통·중방)
- 김정일의 '태양상'(초상화), 12.20 김일성광장·4.25문화회관·당창건기념탑 등 수도 여러 곳에 설치(12/21, 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은 및 黨과 국가·무력기관 책임일꾼들, 12.20 '김정일 영구'에 애도 표시(12/20, 중통·중·평방)
- 김정은과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이 護喪을 서고 있는 가운데 금수산기념궁전 '김정일 영전'에 北 체류 해외동포들과 駐北 各國 외교대표·국제기구대표들 및 무관단이 12.20 '조의 표시'(12/21, 중통·중방)
- 김정일의 '태양상'(초상화), 12.20 김일성광장·4.25문화회관·당창건기념탑 등 수도 여러 곳에 설치(12/21, 중통)



나. 경제

● 北 조기안정 노력…단둥 교역 재개(12/22,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내부 혼란을 조기에 수습, 사회 안정을 꾀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은 김 위원장 사망 발표 후 한때 중단됐던 단둥-신의주 간 교역이 22일부터 전면 재개되는 등 빠르게 정상을 회복
- 단둥의 한 무역상은 "해마다 12월부터 북한의 신년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이듬해 2월까지의 북중 교역의 비수기"라며 "(현재) 교역량이 이달 초보다 줄긴 했지만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만큼 교역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함.
- 단둥의 한 대북 무역상은 "북한 파트너가 '상부로부터 동요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며, '조문을 위해 귀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며 "북·중 무역도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상

● 中투먼개발구 北노동자 취업 허용 (12/22, 연합뉴스)

- 북한의 함북 온성군 남양과 마주한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門)시 공산당위원회의 류보(劉波) 선전과장은 2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투먼경제개발구 안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기업공업원구를 따로 조성했다고 밝힘.
- 류 과장은 외부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주로 고용한다는 의미에서 '북한공업단지'라는 별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기업공업원구라고 설명하면서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취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함.

● "北 상점·식당·카지노 영업중단"(12/22, 블룸버그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추모하기 위해 북한 내 상점과 식당, 외국인 투자 카지노 등이 영업을 중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 보도
- 홍콩의 엠퍼러 그룹은 북한 라선 경제특구에서 199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5성급 호텔의 카지노 영업을 지난 21일부터 중단했다고 밝힘.
- 호텔 측은 또 소매업소들의 문을 임시로 닫고, 여행업체가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북한 관광 예약 접수도 잠정 중단
- 영국인이 베이징에서 운영하는 고려여행사와 단둥중국국제여행사는 김 위원장 사망과 무관하게 평양 단체관광과 예약 접수를 중단했다고 밝힘.

● FAO "北 수개월내 아사자 속출할수도"(12/2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은 올해 작황 개선에도 만성화된 겨울식량 위기로 수개월 내 아사자들이 속출할 수 있다고 유엔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전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
- FAO는 '아시아 식량현황' 보고서에서 "올해 수확량이 작년보다 8.5% 늘었지만 주민들을 먹여 살릴 식량이 바닥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어



서 외부 지원이 없으면 수개월 내 식량난 심화로 아사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

- 식량안보 분석가인 아리프 후세인은 RFA에 "작황 개선과 무관하게 주민들의 영양실조가 심각한 상태여서 내년에 약 300만 명이 외부의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함.
- 덴마크 비정부기구(NGO)인 '미션 이스트'의 피터 드러몬드 스미스 사업국장도 "자체 식량생산으로 약 10개월 간 주민을 먹여 살릴 수 있고 확보된 수입 물량으로도 약 2주간 버틸 수 있다"며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사회적 동요까지 일어나면 식량 사정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

● **北라진-금강산 관광 내년 3월 시작(12/23,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도 외국 관광객 모집을 통한 외화벌이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23일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의 여행사들에 따르면 지린성 훈춘(琿春)시에서 북한 원정리~라진~금강산을 잇는 시범관광이 지난달 종료되고 내년 3월부터 정식 관광이 시작된다고 뉴스는 전함.
- 여행업계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홍콩의 선우그룹에 훈춘~라진~금강산 관광사업의 독점권을 부여했으며 옌지의 해외여행사가 동업자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라진~금강산에 투입되는 유람선은 북한 만경봉호에서 홍콩 선적으로 바뀔 전망
- 북한은 또 중국의 부자들이 많은 화동(華東)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상하이~평양 노선에 고려항공 직항편 운항을 시작했으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의 경제모델을 모방해 라선특구 건설한 후 외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 금강산 관광을 다각화해 외화벌이에 나서는 등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분석

● **中, 北 식량원조 가능성 부인 안 해(12/23, 연합뉴스)**

-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 이후에 식량원조를 할 것이라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조선(북한)과 조선반도 안정은 각 측의 이익에 부합하며 중국은 줄곧 힘닿는 선에서 조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류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사회가 조선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조선 경제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 그의 이런 언급은 그동안 중국의 대북 식량원조 원칙을 되풀이한 것으로도 보이나 향후 식량원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北원정리-라진 도로 개통(12/23,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통로로 부상한 북한 원정리~라진항 구간의 포장도로가 최근 개통됐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도 원활히 소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에서 대북사업을 하는 중국인 H씨는 2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원정리~라진항 구간의 2차선 포장도로가 70% 가량만 완공됐으나 최근 차량통행을 허용, 양쪽의 물자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힘.
- 그는 그러나 북한 전역이 아직 조문 분위기여서 주민들 대다수가 생산 현상으로 복귀하지 않았으며 제품생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양국 간 교역이 사실상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으로 들어갈 때 조문용 꽃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함.
- 중국은 지난 1월 처음으로 1만7천t을 라진항에서 상하이로 운송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10만t 가까운 훈춘산 석탄을 남방으로 수송했으며 원정리-라진항 도로 보수가 끝나면 운송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라진항이 본격 가동되면 연간 100만t의 석탄을 남방으로 운송할 수 있어 기존의 철도 수송에 비해 연간 6천만 위안(약 100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

● 北라선특구 m²당 30달러에 분양(12/24, 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을 모방해 건설하는 라선 경제특구의 부지를 m²당 30달러에 분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 사정에 밝은 중국 지린(吉林)성의 소식통은 2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라선특구에서 위치가 좋은 곳의 땅을 m²당 30달러에 50년간 임대하고 있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이어 북한이 라선특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주변 도로와 하수도, 주택, 호텔 등 기초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는 가운데 전력이 부족해 전등이 수시로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입주업체들도 몇 개 없다고 전함.
- 그는 북한이 이처럼 기초시설 건설 자금이 부족해 자국 내 광산개발권을 제시하며 관련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힘.
- 라선특구 개발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소식통은 러시아 극동 자루비노에서 라진까지 철도가 이어졌다면서 러시아 철도의 궤도폭이 북한보다 넓어 북한 철도 궤도를 수정하는 작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번 철도 현대화 사업을 위해 2억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과 러시아는 라선특구에서 각각 3개와 1개의 부두 사용권을 확보했으며 국제화물 수송을 위해 공동으로 13개의 부두를 새로 건설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다. 군사

● 北, 단거리 미사일 2발 시험발사(12/19, 연합뉴스)

- 북한이 19일 오전 함경남도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면서 "군 당국에서 계속 추적해오던 사안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는 무관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 그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 120여km 내외로 추정된다"면서 "이미 배치된 미사일의 성능과 사거리를 개량하기 위해 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함.
-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에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에 대해 "성능개량 이상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 "발사 수량과 장소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함.
- 북한은 최대 사거리 120km의 KN-02 지대지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려 KN-06로 개량하기 위해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군당국은 파악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KN-02 2발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라. 사회·문화

● 일부 北주민 '시장 폐쇄' 더 걱정(12/19,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보도를 접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 1994년 김일성 사망 때와 사뭇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시장에만 주로 의존하는 지방 주민들은 오히려 김정일 사망에 따른 슬픔보다는 '애도기간' 시장이 폐쇄된다는 사실을 더 걱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 대북소식통은 19일 함경북도 회령 주민의 말을 빌려 "기관, 기업소, 학교 등에 모여 '특별방송'을 기다리던 주민들은 김정일 사망 보도를 접하자 눈물을 흘리며 '장군님'을 외치고 있다"며 "하지만 서로 눈치를 보며 억지로 우는 것 같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함.
- 이 회령 주민은 "가두여성(가정주부 및 무직여성)들은 이날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지 말고 인민반에 모여 '중대방송'을 청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인민반에 모여 방송을 듣던 여성들은 오히려 시장 폐쇄를 더 걱정하느라 바빴다"고 말함.
- 또 김정일 사망보도 직후 양강도 혜산 주민과 통화한 한 탈북자는 "1994년 김일성의 사망 때는 온 나라(북한)가 울음바다가 됐다"며 "하지만 이번에 김정일 사망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전함.
- 이 탈북자는 "주민들은 서로 말을 아끼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는 중"이라며 "시장에만 의존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시장이 폐쇄돼 쌀값이 오를까봐 더 걱정한다"고 말함.



● **훈춘·투먼 접경지 팽팽한 긴장감(12/20,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발표 이틀째인 20일 북·중 접경지역인 지린(吉林)성의 훈춘(琿春)과 투먼(圖門), 방촨(防川)은 국경 주변에 민간인 접근이 금지되고 경비가 삼엄해지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훈춘 시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변경지역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으며 북한 사람과 인터뷰, 주변지역 사진 촬영 등이 금지됐다고 밝힘.
- 훈춘 시로 들어가려면 거쳐야 하는 조선족자치주의 주도 옌지(延吉)만 해도 북한 식당들이 잠시 영업을 중단했을 뿐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으나 북한과 바로 마주한 변경지역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
- 북한과 중국에 정통한 소식통은 "중국 공안당국이 변경지역 주변에 경비병력을 크게 늘렸다"면서 "만일의 경우 탈북자들의 집단 이탈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는 것 같다"고 전함.

● **WP "北주민 통곡은 진심"(12/20, 워싱턴포스트(WP))**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주민들이 통곡하는 영상이 잇따라 공개된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강요된 슬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시간) 보도
- WP는 일부는 '가짜 통곡'일 수 있으나 대다수는 진심에서 나오는 슬픔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면서 옛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 등의 사망 당시와 비교
- 특히 절대적 고립 속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친애하는 지도자'는 날씨가 달과 같이 항상 곁에 있는 존재여서 그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곡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진단

● **"北, 외국인에 출국통보...중국인 귀국러시"(12/2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출국을 요구해 중국인이 속속 귀국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
- 최근 북한을 다녀온 중국인 류모씨는 RFA에 "지난 15일 평양에 갔다가 어제(21일) 평양발 베이징행 국제열차편으로 귀국했다"며 "김 위원장 사망 발표가 있었던 19일 인민반장으로부터 '외국인들은 24일까지 북한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부랴부랴 귀국했다"고 말함.
- 류씨는 '일주일내 출국' 통첩에 따라 열차표를 구하지 못한 많은 사람이 발만 구르고 있다고 전하며 자신도 지인을 통해 표 한 장을 사는데 웃돈(35달러)을 얹어 100달러를 냈다고 함.



- **"北 평양 정전 지속, 시장도 폐쇄"(12/25, 마이니치신문)**
 - 북한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정전이 계속되고 시장도 폐쇄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5일 보도
 - 이 신문은 중국을 방문한 여러 명의 평양 주민 증언을 토대로 김 국방위원장의 사망 당일인 17일 이후 평양시내 거의 전역에서 정전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함.
 - 이는 평양에 전력을 공급하는 2곳의 화력발전소 가운데 한 곳은 수리 중이고, 다른 한 곳은 수개월 전부터 석탄 공급이 지체되면서 연료가 고갈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함.

- **"北전역 조의식장에 봉사대 3만개 설치"(12/25, 노동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전역에 설치된 조의식장 주변에 지난 24일 현재 봉사대 3만여 개 등이 설치됐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5일 보도
 - 노동신문은 이날 "24일 현재 전국적으로 3만여 개의 봉사매대와 1만여 개의 의료초소가 전개돼 조의식장을 찾는 근로자와 학생을 위한 봉사와 치료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함.
 - 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 추운 날씨에 조의식장을 찾은 천만 군민을 생각하시며 각지 당조직과 일꾼이 그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장해줄 데 대한 뜨거운 은정을 또다시 베풀어주셨다"고 설명

- **북한이 밝힌 동상 없는 이유(12/25,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을 맞은 북한 주민들은 김 위원장이 새겨진 벽화 등을 찾아 추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김 위원장의 동상은 전국적으로 2~3개뿐이고 그나마도 국가안전보위부 본청사와 인민무력부 사적관 등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위대한 아버지의 동상을 모시지 못한 사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위원장의 동상이 없는 이유를 상세히 소개
 - 1998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면서 본격적으로 김정일 시대를 연 이듬해인 1999년 김 위원장의 동상 건립안건이 제기됐으나 김 위원장은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해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이 땅 위에 강성대국을 세울 생각밖에 없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바라지도 않는 동상을 세우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관계자들을 질책했다고 노동신문은 소개



2. 대외정세

가. 일반

● 中, 김정일 사망 공식 애도 표명(12/19,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공식적인 애도의 뜻을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중국 외교부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행한 서거 소식을 접하고 놀랐다"며 "우리는 이에 깊은 애도를 표시하고 조선 인민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힘.
- 마 대변인은 "김정일 총서기는 조선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이자 중국 인민의 친밀한 벗으로서 조선의 사회주의와 중조 우호 협력 관계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는 조선 인민이 일치단결해 조선의 사회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며 "중국과 조선은 함께 노력해 양당, 양국의 전통 우의를 공고히해나감으로써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에 적극적인 공헌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 英외무장관 "북한 전환점 될 수도"(12/19,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19일 성명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북한 주민들이 공식적인 애도 기간에 들어갔다. 지금이 그들에게 힘든 시기임을 이해한다"고 밝힘.
- 헤이그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이 북한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면서 "북한의 새 지도자가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임을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함.
- 헤이그 장관은 또 북한을 향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면서 평화와 안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

● 日 애도 표명...움직임 긴박(12/19, 연합뉴스)

-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19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돌연한 서거 소식에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그는 일본 정부 차원의 조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시점에서 무엇인가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북측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의 조문단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함.
- 북한으로의 도항 금지 조치를 해제할지도 "앞으로의 검토 과제"라고 여지를 둬.
-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돌연한 사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북한의 후계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 김 위원장의 사망이 6자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협약이 계속되고 있다고 듣고 있다"면서 다음 협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언급

● **日조총련, 조문대표단 파견(12/19,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충격에 빠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중앙본부는 뒤늦게 조기를 내걸고 추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후지미(富士見)에 있는 조총련 중앙본부는 19일 오후 2시50분께 중앙본부 정면에 내걸린 인공기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려 조의를 표시
- 조총련은 이날 오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총련 대표들로 이뤄진 조의 대표단을 파견하고, 21~22일(오전 10시~오후 5시) 도쿄 조선회관에서 외부 조문객을 맞겠다"는 내용의 추도 사업 계획을 밝힘.

● **"美, 김정일 사망 '조의표명' 검토 중"(12/19,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 정부 차원의 조의를 표명하는 문제를 검토 중 인 것으로 19일(현지시간)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통한 현지 외교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조의표명을 할 것인지, 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할 지 등을 놓고 현재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함.
- 이와 관련, 빅토리아 놀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의표명과 관련된 질문에 "향후에 취할 조치에 대해 현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면서도 "계속 지켜보라. 오늘 관련회의들이 진행중"이라고 말함.
- 놀런드 대변인은 이어 '김정일의 사망에 조의를 표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경우에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 이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뒤 언급한 내용을 덧붙임.
-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북한 주민들과 개선된 관계를 희망한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동시에 그들의 안녕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함.

● **中후진타오, 北대사관 조문(12/20, 신화통신; 연합뉴스)**

-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20일 오전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방문해 조의를 표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함.
- 후 주석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 발표 다음날 오전 북한 대사관을 방문해 조문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인 것은 북·중간 우호관계가 매우 공고하다는 점과 함께 중국이 북한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이에 앞서 중국은 김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당일인 19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원 등 4개 기관 명의로 조전을 보내 김정은 영도 체제를 인정하고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힘.

- 중국은 김 위원장의 사망 발표 당일 김정은 후계승계를 인정하는 내용의 조전을 발표하고 다음날 후 주석이 조문을 하는 등 김정일의 사망에 따른 북한의 혼란을 막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비교적 빠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中, 김정은 지도체제 또 언급(12/20,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김정은 동지의 영도하에 노동당을 중심으로 단결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선반도(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과 평화를 위해 전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그는 이어 "김정일 위원장은 위대한 영도자이자 중국 인민의 친밀한 친구로서 조선 사회주의 발전과 북중 우호관계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덧붙임.
- 중국은 19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원 이름으로 북한에 보낸 조전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삼남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차기'로 거론
- 조전은 "우리는 조선(북한) 인민들이 노동당을 중심으로 단결해 김정은 동지의 영도하에 슬픔을 힘으로 전환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전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적음.

● 中, 北에 조문단 안 보낼 듯(12/20,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애도의 뜻을 전하기 위한 조문단을 북한에 파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에 조문단을 보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선(북한)은 외국의 조문단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고 답함.
- 아울러 류 대변인은 북한의 새 영도자로 공식화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중국과 조선 쌍방은 고위층 왕래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우리는 조선의 영도자가 편리한 시기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함.

● 中지도부 집단조문(12/20, 신원론편(新聞聯播))

- 중국중앙(CC)TV 저녁 뉴스 프로그램인 '신원론편(新聞聯播)' 따르면 후 주석과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리창춘(李長春)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당·정·군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이날 오전 북한 대사관을 찾아감.
- 후 주석은 "중국 당과 정부는 김정일 동지의 서거에 비통한 심정"이라며 "중국 인민은 조선의 위대한 영도자이자 중국 인민의 친밀한 벗인 그를 영원히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 후 주석은 이어 "우리는 조선 인민이 김정일 동지의 유지를 받들어 조선 노동당을 중심으로 단결해 김정은 동지의 영도 아래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
- 한편, CCTV는 장쩌민(江澤民·85) 전 국가주석도 이날 빈소에 회관을 보냈다는 사실을 함께 전함.
- 이날 조문에는 국가 지도자 외에도 귀보슝(郭伯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과 양제츠 외교부장, 링지화(令計畫) 당 중앙서기처 서기 겸 중앙판공청 주임,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 등이 대거 동행
- 후 주석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 발표 다음날 오전 북한 대사관을 방문해 조문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인 것은 북·중간 우호관계가 매우 공고하다는 점과 함께 중국이 북한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

● 클린턴 "북한 주민에 위로 전한다" 조의(12/20, 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북한은 현재 국가적 추도기간"이라며 "우리는 북한 주민의 안녕을 깊이 우려하며(deeply concerned), 이 어려운 시기 주민들에게 '위로'(thoughts and prayers)를 전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 성명의 문구는 사망한 당사자인 김 위원장의 죽음을 직접 애도하는 구체적인 영어 표현인 'condolence'(조의)라는 단어는 피하되, 북한 주민들을 위로하는 형식으로 정부 내 논의를 거쳐 채택된 표현으로 보인다

● 러시아, "북핵 합의·공동사업 준수 희망"(12/22, 연합뉴스)

- 러시아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어도 북핵 합의, 러시아와 남북한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가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알렉산더 루카세비치 외무부 대변인이 22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루카세비치 대변인은 이날 "북핵 문제의 합의와 러시아-남북한 간 경제 프로젝트의 이행에 관한 문서를 비롯한 앞서 타결한 협약이 모든 관련 당사국에 의해 준수되기를 바란다"고 언명
- 또 루카세비치 대변인은 "최근 보도로는 북한의 상황이 평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와 기업, 산업, 운송과 통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김정일의)장례 의식이 북한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 북한과 한반도 전체의 정세가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함.
- 또 루카세비치 대변인은 "지역의 핵심적인 동반국들과 접촉을 통해 이들도 우리와 비슷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
- 앞서 지난 19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후



계자인 김정은에게 조전을 보냈으며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와 선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사망이 양국 우호관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

■ 기타 (대외 일반)

- 베네수엘라 대통령 및 쿠바 내각 수상 등 親北 국가수반과 정부 및 단체들, 12.19 김정일 사망 '애도 표시·弔文·성명' 발표(12/20, 중통·중·평방)
- 美 프랭클린 그라함 목사, 12.19 김정은에게 弔電 발송(12/21, 중통)
- 김정은에게 12.19~20 몰도바 前 대통령, 네팔·방글라데시 대통령, 라오스 인민혁명당, 러시아원동연방구駐在 대통령 전권대표, 캄보디아 국왕 등 弔電 발송(12/21, 중통)
- 美 前 대통령 '지미 카터', 12.19 김정은에게 弔電 발송(12/22, 중통)
- 유엔사무총장·유엔사무국 고위인사들·세계식량계획 집행국장대리·국제전기통신동맹 총서기대리 및 국제기구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등, 12.19~21 北 상설대표부 등에 弔意방문(12/22, 중통)
- 팔레스티나·시리아·기네·카자흐스탄·벨라루시·뚜르크메니스탄대통령과 도미니카통일된 좌익운동·도미니카혁명적대안당·로르니아사회주의당 최고이사회 위원장 등, 12.19 弔電(12/22, 중통)
- 멕시코노동당 전국조정위원회 조정자, 12.19 김정은에게 弔電(12/22, 중방)
- 코스타리카 인민전위당 중앙위 총비서, 12.19 김정은에게 弔電(12/22, 중방)
- 하셰미트 요르단왕국 국왕, 12.19 김정은에게 弔電(12/22, 중통)
- 이집트 무장력최고이사회 위원장·베트남 주석·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 총비서·적도기네 대통령·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이사회 총위원장 등, 12.20 弔電(12.22, 중통)
- 駐러 중국대사 및 국방무관, 12.20 駐러 北대사관 弔意 방문(12/22, 중방)
- 페루 노동자농민학생인민전선 위원장, 12.20 김정은에게 弔電(12/22, 중방)
- 몽골 대통령과 수상, 12.20 김정은에게 弔電(12/22, 중방)
- 가이아나·가나·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대통령, 12.21 弔電(12/22, 중방)

나. 6자회담(북핵)

● 美, 북미대화·대북지원 연기할 듯(12/19, AP통신)

- 미국은 18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라 북한과



의 추가 대화 및 대북지원 결정 발표를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AP통신이 보도

- 이 통신은 빠르면 19일 중으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발표가 예상됐으나 김정일의 급사로 이런 결정이 연기될 것 같다고 미 당국자들이 말했다고 전함.
- 미 당국자들은 북한 당국자들이 외부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향후 북한과의 대화 및 대북지원 문제에 대한 결정이 거의 확실히 연기될 것 같다고 말함.
- AP통신은 당초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최고위급 외교·안보관계자들이 19일 만나 북한과의 대화 및 대북지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최소한 김정일 추모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북한의 정책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함.
- 이에 앞서 AP통신은 미국이 빠르면 19일 북한에 대한 상당한 식량 지원을 발표하고 북한도 이후 수일 내에 우리나라 농축 프로그램(UEP) 잠정 중단(suspend) 방침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북미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美-北, 김정일 사망후 첫 '뉴욕채널' 접촉(12/20, 연합뉴스)

- 미국과 북한이 19일(현지시간) 뉴욕채널을 통해 실무접촉을 벌였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레브리핑에서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된 '기술적 논의'를 전일 뉴욕채널을 통해 가졌다고 전함.
- 눌런드 대변인은 이 접촉에서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된 기술적 사안들만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좀 더 넓은 것을 논의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것(접촉)은 실무 수준(technical-level)이었으며, (대북) 영양지원과 관련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
- 그는 또한 "(대북지원을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으며 이를 계속 논의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애도기간임을 감안할 때 우리가 새해 이전에 이들 문제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함.
- 한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전일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에 이어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김정일 사망에 따른 한반도 정세를 논의

● 美 "영양지원·대화재개 계속 추진"(12/21,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1일(현지시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중단된 대북 식량지원 및 북미 대화와 관련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레브리핑에서 지난 19일 뉴욕채널을 통한 북미간 접촉과 관련, "전화통화가 있었다"면서 "이 접촉에서 우리측은 영양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함께 양자대화 및 6자회담



- 재개를 위한 요구조건 등을 거듭 밝혔다"고 설명
- 그는 "현재 북한의 상황을 감안할 때 (통화한) 북측 관계자는 새로운 지침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우리도 추도기간을 존중하고 싶지만 공은 여전히 북한 쪽에 있다"고 지적
- 이는 북한이 원할 경우 식량지원 문제와 함께 당초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예정됐던 제3차 북미 고위급 대화에 대해 언제라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고 뉴스는 전함.

● **임성남·우다웨이, '포스트 김정일' 의견교환(12/22,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22일 베이징(北京)에서 3시간 30분 동안 만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우리 측은 그러나 만찬을 겸한 회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뉴스는 전함.
- 임 본부장은 베이징 출국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중 양국이 6자회담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의 일치가 있다"고 강조
-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6자회담 관련국들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애도기간이 끝나면 내년 1월 중에 제3차 북미 대화를 개최하고 6자회담 재개절차에 들어간다는데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짐.

■ 기타 (6자회담(북핵))

- 北, 美 VOA방송 인용하여 "미국은 조-미 회담문제를 계속 다루어 나가기를 원한다고 美 국무성이 밝혔다"고 전언(12/23, 중통)

3. 대남정세

● **〈김정일 사망〉 정부 발표문 전문(12/19,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리해 '정부 발표문' 형식으로 공개
- 정부는 오늘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대내외 상황을 점검
-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대응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국민들에게 아무 동요 없이 경제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이를 위해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



● **軍 "워치콘 격상 않기로..차분히 대응"(12/19, 연합뉴스)**

-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19일 오후 합참에서 긴급 회동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이후 북한군의 동향을 평가했다고 합참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날 오후 3시20분께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은 서먼 사령관은 약 40분간 정 의장과 함께 북한 및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공유 등 한·미간 공조체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두 사람은 특히 대북정보감시 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한·미 연합감시 자산을 증강운용해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뉴스는 전함.

● **개성공단은 무풍지대(12/20, 연합뉴스)**

-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남북관계가 당분간 '올스톱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북한 전역의 모든 상점이 문을 닫는 등 애도 분위기에 젖어 있지만 사망 발표 이튿날인 20일 개성공단은 정상 조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에 따르면 사망 발표 당일인 19일 오후 3시에 조기 퇴근했던 북측 근로자 4만8천여 명은 이날 정상 출근해 조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례적인 개성공단의 정상 조업에 대해 근로자의 동요를 막고 외화벌이 창구를 유지하고자 하는 북측과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남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해석
- 앞서 통일부는 모든 방북 허가를 잠정 보류기로 하면서도 개성공단은 예외로 했으며, 정부는 또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주재로 개성공단기업협회 임원과 간담회를 하고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할 예정

● **北 "결핵의약품 전달 미뤄달라" 요청(12/20, 연합뉴스)**

- 북한이 한국에 본부를 둔 대북 의료지원단체로부터 오는 22일 반기로 했던 어린이용 결핵의약품의 전달을 당분간 미뤄달라고 요청해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사단법인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총재 권이혁)는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명의로 결핵의약품 전달을 미뤄달라는 공문을 20일 팩스로 받았다고 밝힘.
- 이 단체는 당초 오는 22일 오전 10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북한 결핵어린이 돕기 결핵의약품 지원식'을 갖고 결핵 환자의 초기 치료에 사용되는 결핵의약품(5종) 3천명 분을 북한에 보낼 예정이었음.
- 본부 관계자는 "20일 오전 베이징에 있는 북측 민화협에서 문서가 들어왔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때문에 연기를 요청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김정일 사망 관련 정부 담화문 전문(12/20, 연합뉴스)**

-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한 공식 입장과 대책을 정리, 이를 담화문 형태로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다음은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정부 담화문 전문
- "국민 여러분, 정부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방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가면서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비상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북한에 어떤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심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애도기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12월 23일로 예정했던 전방 지역에서의 성탄 트리 점등을 금년에는 유보하도록 교계에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현 북한 상황과 관련하여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조문단 방북에 관한 통일부의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조문단을 보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하여 북측의 조문에 대한 답례로 방북 조문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 **한중 정상 전화통화 '불통'(12/20,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주변 4강(強) 가운데 미국, 러시아, 일본 정상과는 전화통화를 했으나 아직까지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는 통화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특히 후 주석은 이날 오전 북한 공관을 방문해 김 위원장의 사망에 조의를 표한 것으로 밝혀져, 남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우리 정부의 대중외교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
-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국 정상간 일정조정외의 문제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한국과 중국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밝힘.

● **민간차원 '대북 조건 발송' 허용(12/21, 연합뉴스)**

- 정부는 21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민간단체나 개인 차원의 조건을 보내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의를 발송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 최 대변인은 "팩스나 우편 등으로 조의문 발송을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청을 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수리할 것"이라고 강조
- 현재 현대아산과 노무현재단,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등이 조의문 전달을 위한 대북 접촉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통일부는 특히 노무현재단 측이 전날 통일부에 보내온 조전을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할 예정

● **박근혜, '국회조문단 구성' 사실상 거부(12/21, 연합뉴스)**

-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국회 차원의 조문단을 구성하지는 민주통합당 원혜영 공동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한나라당 대표실에서 원 공동대표의 예방을 받고 '국회 조문단 구성'과 관련, "남남갈등, 국론분열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런 문제는 정부의 기본 방침과 다르게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는 국회차원의 조문단을 구성하지는 원 공동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

● **北 "현정은 회장 조의방문 환영" 통지문(12/22, 연합뉴스)**

- 22일 정부 및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은 21일 저녁 개성공단 내 현대아산 개성사업소에 통지문을 보내 "현 회장의 조의 방문을 위한 평양 방문을 환영한다. 육로로 오면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 통지문은 북측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가 현 회장 앞으로 보냈으며, 북측은 통지문에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 일정을 빨리 알려 달라"고 덧붙였다.
- 이에 따라 현 회장과 이 여사의 조문 방북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방북 시기는 26~27일, 또는 27~28일 1박 2일 일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짐.
- 정부는 현재 이 여사 및 현 회장 측과 방북 인원 규모와 시기, 경로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이틀째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는 이번 방북 조문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정몽헌 회장에 대한 북측의 조문에 대한 답례 성격인 만큼 방북 규모를 필수요원으로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한편 이 여사 측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과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의 동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짐.

● **통일부, 北에 노무현재단 조의문 전달(12/22, 연합뉴스)**

- 통일부에 의하면 22일 오후 3시5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노



무현재단의 조의문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노무현재단은 300여자 분량의 조의문에서 "유가족과 북한 동포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김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10·4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고인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 北에 손내민 李대통령.. '대원칙'은 고수(12/22,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2일 청와대 회담은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 이 대통령의 대북 기조가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였으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조의 범위 및 수준과 관련한 일련의 정부 조치들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길 희망한 이 대통령의 언급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일부 야권과 좌파 진영에선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중도 우파'를 자임해온 현 정부의 대북 기조를 고려할 때 여야와 좌우의 요구를 절묘하게 배합한 절충안으로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
-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 사회가 안정되면 남북 관계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 남북 관계에 일대 해빙기를 불러올 획기적 변화가 수반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까지 낳았다고 뉴스는 전함.
- 이 같은 언급은 아직 북한 정권의 구도와 대남 정책 기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고려해 가능한 한 선에서 최대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
- 그러나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고수해온 대북 기조의 '대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문호를 개방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안전을 보장하고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그랜드 바겐(북핵 일괄타결)'의 비전은 계속 제일 목표로 추구하겠다는 것
- 특히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재발 방지 요구 역시 유연성을 펼 수는 있지만, 비핵화 프로세스 돌입과 같은 '대원칙'에 북한이 먼저 부응하는 성의를 보여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

● 北 "남측 모든 조문·사절 받을 것"(12/23,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2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남한의 모든 조문단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힘.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남측 조객들에 대한 우리의 성의있는 조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의 해당 기관들에서는 조의방문을 희망하는 남조선의 모든 조의대표단과 조문사절들을 동포애의 정으로 정중히 받아들이며 개성육로와 항공로를 열어놓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한다"고 전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어 "체류기간 남조선 조문객들의 모든 편의와 안전은 충분히 보장될 것이라고 한다"며 "이것은 대국상의 슬픔을 함께 나누려는 남조선 각계층의 뜨거운 추모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레의와 성의의 표시"라고 강조



- **통일부, "조문·조의 기존입장 변화 없어"((12/23,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해 북측이 "당국 자신도 응당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조문·조의와 관련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 당국자는 "김 위원장에 대한 조의·조문은 정부가 담화문을 통해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관계의 과거와 현재, 미래, 국민정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정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 어떤 변경도 가할 생각이 없다"고 말함.

- **김성환 외교 "美, 北체제인정 표명 안했다"(12/23, 연합뉴스)**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3일 미국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후계 체제를 인정했는지에 대해 "미국이 아직 (후계) 체제를 인정한다고 표명한 게 아니고 언론이 해석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통합당 박선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김정은에 대해 북한 지도계급에서 어떤 타이틀을 줄 지 결정이 안된 상태"라고 부연

- **北 "南당국 조문태도로 진정성 최종검토"(12/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조문하는 남측 당국의 태도를 지켜보고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 조평통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이 각계층의 조의방문길을 막아놓아 가로막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이번 조의방해 책동이 북남관계에 상상할 수 없는 파국적 후과(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함.
 - 대변인은 이어 "온 겨레는 이번에 남조선 당국의 도덕적 한계뿐 아니라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남측 각계의 조문 허용 수위를 지켜본 뒤 향후 남북관계 개선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 **이희호·현정은, 내일 육로로 조문 방북(12/25, 연합뉴스)**
 -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89)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56)이 2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조문을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들은 26일 오전 10~11시경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뒤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향할 예정
 - 조문 방북단은 이 여사 측 13명, 현 회장 측 5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여사 측에서는 이 여사와 이들 홍업·홍결씨, 큰며느리, 장손 등 김 전 대통령 유족 5명, 이 여사 수행원·주치의·경호관 8명으



로 이뤄졌고, 현 회장 측은 장경작 현대아산 대표, 김영현 현대아산 관광경영본부장(상무) 등 현대아산·현대그룹 임직원 4명이 현 회장을 수행한다고 뉴스는 전함.

● 北, 반기문 조전 실명보도(12/25, 연합뉴스)

- 북한 언론매체는 24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조전을 보낸 사실을 반 총장 실명을 언급하며 일제히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앞서 23일 반 총장이 김 위원장의 사망에 즈음해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하면서 반 총장의 실명은 빼고 '유엔사무총장'이라고만 소개
- 북한이 반 총장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김 위원장의 사망에 대해 남한 출신의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해 전 세계가 슬퍼한다는 점을 부각해 주민들의 충성과 결속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기타 (대남)

- 김정일 사망 관련,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진보신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기독교교회협의회, 12.19 애도의 뜻 표시(12/19, 중통)
- 김대중 前 대통령 부인 '이희호', 12.19 애도의 뜻 표시(12/20, 중통)
- 南 野黨인사들과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및 시민단체들(「범민련」 남측본부 등), 12.19 김정일 사망 '조의 표시 및 弔文' 발표(12/20, 중통·중·평방)
- '노무현재단'도 "조문단 파견" 결정(12/21, 중통)
- 南 노무현재단과 한반도평화포럼, 12.20 김정일 사망 弔意文 발표/ 불교 조계종도 12.21 애도문 발표(12/21, 중통)
- 박지원(민주통합당소속 국회의원), 12.21 北 방문의사 표명(12/22, 중통)
- 김진표(민주통합당 원내대표), 12.22 北에 조문을 하지 않는 당국을 비난 보도(12/22, 중통)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참여연대를 비롯한 민간단체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중심으로 조문단을 구성할 데 대해 토의(12/22, 중통)
- 한상렬, 12.21 옥중에서 깊은 애도의 뜻 표시(12/22, 중통)
- 南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12.20 조의 성명 발표(12/22, 중통)
- 범민련 남측본부, 12.20 의장단 회의를 가지고 12.29까지 애도기간 및 추모행사 제안 주장(12/22, 중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백악관, 北새지도부 비핵화 결단 거듭 촉구(12/21)

- 미국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새 지도부에 대해 비핵화 약속 준수를 거듭 촉구했음.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평화와 안정, 북한 주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여기에는 자신들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포함된다"고 밝혔음.
- 카니 대변인은 김정일 사망 이후 역내 동맹국 및 관련국들과 미국이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음.

● "美하트-北한성렬 접촉"..'뉴욕채널' 이례적 공개(12/22)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에도 미국의 클리포드 하트 6자회담 특사와 북한의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대북 식량(영양) 지원과 비핵화 현안 등을 실무 협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
- 미국은 20일(현지시간) 국무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이 참여하는 이른바 '뉴욕채널'의 가동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음. 정통한 현지 외교소식통은 21일 "뉴욕 채널은 하트 특사와 한성렬 차석대사간 전화협의를 일컫는다"면서 "뉴욕채널이 수시로 운영돼 왔지만 김 위원장 사망 직후인 19일(미국동부시간)에도 북한이 이 채널을 가동한 것은 상당한 외교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음.
- 19일 협의의 경우 북한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와 리근 북미국장간 베이징(北京) 협의에서 의견이 좁혀진 대북 식량지원의 조기실현을 바라는 한편 자신들이 약속한 비핵화 사전조치의 이행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 소식통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으로 볼 때 지난주 베이징에서의 북미 협의 결과는 유효한 쪽으로 흐름이 잡히는 것 같다"면서도 "워낙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북한의 향후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전체적인 흐름이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외교계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김정일의 유훈'을 명분으로 그동안 진행해온 북미 협의를 추진할 경우 내년 초께 북미 3차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또 다른 소식통은 "북미간 제네바 핵협상이 한창이던 1994년 7월 김일



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북한 대표단은 협상에서 철수했다가 한 달 만에 복귀했고, 그 뒤 협상이 급진전돼 그해 10월 제네바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다"면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도 제네바 때와 같은 일이 진행될 경우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편,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레브리핑에서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된 '기술적 논의'를 전달 뉴욕채널을 통해 가졌다고 공개했음.
- 김정일 사망 이후 미국과 북한 간에 이뤄진 당국 간 첫 공식 접촉임.
- 놀런드 대변인은 이 접촉에서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된 기술적 사안들만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좀 더 넓은 것을 논의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것(접촉)은 실무 수준(technical-level)이었으며, (대북) 영양지원과 관련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 성 김 주한미국대사는 21일 서울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베이징 북미협의를 등과 관련, "북미 간 대화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서로 어떤 약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전 김 위원장이 사망했다"고 말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한 배석자가 전했다.
-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뉴욕채널의 가동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관측통들은 ▲현재 협상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와의 협상의지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음.

● 美 "영양지원·대화재개 계속 추진"(12/22)

- 미국 정부는 21일(현지시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중단된 대북 식량지원 및 북미 대화와 관련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레브리핑에서 지난 19일 뉴욕채널을 통한 북미 간 접촉과 관련, "전화통화가 있었다"면서 "이 접촉에서 우리 측은 영양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함께 양자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요구조건 등을 거듭 밝혔다"고 설명했다.
- 그는 "현재 북한의 상황을 감안할 때 (통화한) 북측 관계자는 새로운 지침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우리도 추도기간을 존중하고 싶지만 공은 여전히 북한 쪽에 있다"고 지적했다.
- 이는 북한이 원할 경우 식량지원 문제와 함께 당초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예정됐던 제3차 북미 고위급 대화에 대해 언제라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됨.
- 실제로 놀런드 대변인은 김정일 사망 직후 북미 양측이 예상외로 빨리 접촉한 것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진행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 그는 다만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해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분명히 밝혔다"면서도 "추도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새로운 지시가 나올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는 이밖에 전화통화 당시 북한측 반응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이후 추가접촉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 임성남 · 우다웨이, '포스트 김정일' 의견교환(12/22)

-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22일 베이징(北京)에서 3시간 30분 동안 만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음.
- 우리 측의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 베이징의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중국 측의 카운터파트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만나 회담에 이어 만찬을 함께 했음. 만찬은 오후 8시 30분께 종료됐음.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조용천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 등이 배석했음.
- 우리 측은 그러나 만찬을 겸한 회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음. 임 본부장은 베이징 출국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중 양국이 6자회담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의 일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6자회담 관련국들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애도기간이 끝나면 내년 1월 중에 제3차 북미 대화를 개최하고 6자회담 재개절차에 들어간다는데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은 탓에 우리 측이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음.
-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임 본부장은 23일 오전 일찍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 미·북 관계

● <김정일 사망> 美, 밤새 분주..대북감시 강화(12/19)

- 미국은 김정일 사망 소식이 전해진 18일 밤(현지시간) 이후 외교안보 부처간 긴급 협의를 밤새 진행하며 북한 내부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북 대응방안을 논의했음. 또 정찰위성과 통신 감청 등을 활용한 북한의 동향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고 CNN방송을 비롯한 미 언론이 19일 전했다.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방부, 국무부 등 관련부처 고위 관계자들은 밤새 잇따라 전화 협의를 가지며 대응 방안을 협의했음. 독일을 방문중인 마틴 템프시 합참의장도 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 지휘부 등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북한군의 동향을 점검했음.
- 미군 지도부는 김정일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백악관은 김정일 사망 이후 내놓은 "상황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는 짧은 성명 외에 더 이상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임. 또 이번 사태와 관련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지 않고 있음.
- 미 언론은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 나올 미국의 '언급 내용'이 향후 북미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미 정부의 움직임에 주시했음.



● <美 '조의성명' 발표.. "한미 공조"-北반응 주목>(12/20)

- 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십야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한 성명을 내놓았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명의였고 제목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대해'였음.
- 성명은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이 현재 국가적 추도기간에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안녕을 깊이 우려하며(deeply concerned), 이 어려운 시기 주민들에게 우리의 염려와 기도(thoughts and prayers)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음.
- 성명은 또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는 약속을 지키고, 이웃나라와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나라를 평화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선택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김 위원장의 공식 직함을 표기하고 북한의 호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명시했음.
- 성명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교적 격식은 차렸지만 분명하게 '조의(condolence)'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미국 정부가 이번 사안을 놓고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대목임.
- 특히 1994년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 당시와 비교하며 미묘하지만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음.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대신해 북한 주민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전한다'는 내용의 공식 조의성명을 발표했다. 또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과 핵협상을 벌이던 로버트 갈루치 협상대표를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의 분향소에 보내 조문을 하게 했음.
- 성명의 주체 측면에서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장관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 볼 때도 '심심한 애도'와 '위로(염려와 기도)'는 격이 다름을 알 수 있음. 1994년 때보다 수위가 떨어졌다는 얘기임.
- 미국 정부는 성명 발표 과정에서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미국의 성명 직후 나온 한국 정부의 '정부 답화문'은 내용이 거의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음.
- 한국 정부의 답화문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돼 있음. 한미 양국이 공통적으로 '위로'를 핵심 키워드로 했음을 알 수 있음.
- 한미 양국 모두 '김정일의 존재'에 대한 이중적 고민을 했다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임. 북한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대형 테러사건에 연루돼있는 김정일이라는 존재에 대해 양국 내부의 보수세력들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현실과 공식적으로 한 국가(유엔회원국)의 최고지도자의 사망이라는 외교적 사안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됨.
- 양국은 또 1994년 당시의 경험도 감안했다는 후문임. 당시 미국은 조의성명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김영삼 정부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 양국관계가 갈등을 빚었음.
- 현지의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더없이 공고한 한미 관계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면 된다"면서 "특히 성명 내용을 보면 북한의 미래는 물론 향후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에 대한 지향점이 제시돼있다"고 설명했다.
- 미국의 성명은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는 약속을 지키고, 이웃나라와 관



계를 개선"이라고 돼있고 한국의 답회문은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약속을 지키고'라는 대목은 당연이 김정일 위원장이 했던 '비핵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북미 관계 개선은 물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와달라는 주문이라 할 수 있음.
- 이제 관심은 북한의 반응임. 1994년 당시 미국의 적극적인 조의표명이 효과를 발휘했는지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 기간이 끝나고 1개월 뒤부터 북미 핵협상을 재개했음. 그 결과 김일성 주석 사망 3개월여 후인 그해 10월 제네바 핵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음. 그러나 당시 조문파동을 겪은 한국의 김영삼 정부와는 끝내 냉랭한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음.

● <김정일 死後> 북미대화 지속에 北 기대감(12/23)

- 속도를 내던 북미간 대화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례일정으로 중단된 가운데 북한은 북미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음. 북한 매체는 후계구도, 북미대화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전하며 사실상 지속적인 북미 대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미국: 조선의 후계구도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은 김 위원장 서거 이후 조선의 후계구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소개했음. 또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김정은은 공식후계자로 지명돼 있으며 이와 관련해 현재 변화가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북한은 미국이 북핵회담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도 전했다. 중앙통신은 '미국 조미회담문제를 계속 다루나가기를 희망'이라는 기사에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인용, "미국은 조미회담문제를 계속 다루어나가기를 원한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다"고 소개했음.
- VOA가 미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대북심리전 매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이 매체를 인용해 미국의 입장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임.
- 중앙통신은 "빅토리아 놀랜드 미 국무성 대변인은 '김 위원장 서거 직후 이뤄진 미북접촉을 대화 지속을 위한 좋은 신호로 봐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대조선 영양지원과 후속 미북회담문제를 다루나가기를 원한다고 답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은 결국 김정은 체제 역시 핵협상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을 끌어내려면 북미관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함.
- 북미 양측은 1994년에도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핵문제를 논의하는 양자간 회담을 중단했지만, 장례를 마친 뒤 대화를 재개해 제네바 합의를 이뤄낸 바 있음.



다. 중·북 관계

● <김정일 사망> 中 '차분속 사태 예의주시(12/19)

- 중국 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후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김 위원장의 공백이 몰고 올 후폭풍 가능성에 예의주시 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음.
- 중국 정부는 19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 형태로 김 위원장의 사망에 애도의 뜻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외에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음. 표면적으로 중국은 김 위원장의 사망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듯함.
- 일각에서는 '혈맹'인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미리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통보해 중국이 한결 여유있는 대응을 할 수 있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옴. 그러나 설사 북한 측이 공식 발표에 앞서 중국에 통보했다더라도 극소수의 수뇌부만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임.
- 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중국 당국자들도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음. 그러나 내막이 어찌 됐든 취약한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하던 김 위원장의 부재가 중국에 주는 부담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중국은 현재 과거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대외 환경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 정치적으로는 내년 가을 18차 당 대표대회를 통한 수뇌부 교체를 앞둔 미묘한 시점인데다 경제적으로도 고속 성장의 시대를 뒤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모델로 전환하는 진통기를 겪고 있음.
- 이런 속에서 김 위원장의 사망이 필연적으로 몰고 올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불확실성 증대는 중국으로서는 전혀 달갑지 않은 결과임. 뉴욕, 제네바의 1~2차 고위급 회담을 거쳐 최근의 베이징 식량지원 협의까지 이어지면서 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 재개 분위기를 차근차근 조성해가던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사망이라는 돌발 변수가 터져 나온 것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으로서는 아쉬운 대목임.
- 김 위원장의 사망 이후 북한 급변 사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언급되는 가운데 중국은 북한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이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 안착하는 데 최대한 도움을 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됨.
- 이날 중국이 발표한 입장 속에도 이런 중국의 의도가 엿보이는 내용이 담겼음.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중국과 조선은 함께 노력해 양당, 양국의 전통 우의를 공고히 해나감으로써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정에 적극적인 공헌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일찌감치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공식화된 가운데 이런 중국의 입장은 김정은 체제를 조속히 안정시켜나가는 데 최대한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는 지적임.
- 전략적으로는 북한 체제의 안정을 지원·유도하는 가운데 중국은 우선 국경 지역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김 위원장의 사망을 계기



로 탈북자가 늘어난다면 북한 체제의 존속을 위협할 뿐 아니라 중국 동북 지역의 안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임.

- 하지만 중국은 즉각적으로 국경 지역에 병력을 증원하는 것보다는 일단 북한 내부의 정세 변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향후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됨.
- 한 대북 소식통은 "아직 중국이 국경 쪽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음.

● <김정일 사망> 中 조선 속 북중관계 '합의'(12/20)

- 중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19일 공식적인 조전을 보냈음. 우선 형식을 살펴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원 이름으로 보내 당·정·군이 일치 단결해서 한 뜻을 전하려 한 점이 눈에 띈.
- 조전의 수신처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을 지정한 것은 중국의 당·정·군이 북한의 당·정·군과 긴밀한 관계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임.
-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중국이 조선에서 "중국과 조선(북한)은 국경을 맞댄 이웃으로서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국 당과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점임.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를 중국의 당·정·군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도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하고 있음. 나아가 앞으로 구성될 북한의 지도체제 역시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과거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라는 급변사태 당시 그에 앞선 1992년 한중 수교의 여파로 냉랭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름.
- 베이징 외교가는 그러나 중국의 이런 제스처가 북한의 내정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는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그동안 적어도 내정만큼은 '마이웨이'를 걸어왔고 중국 역시 다른 나라의 내정에는 불간섭한다는 외교적 원칙을 지켜 왔다는 점에서임.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은 상당 기간 북한의 내부 상황을 지켜 보고 나서 안정기에 접어들면 새로 구성될 수뇌부와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음. 그런 점에서 중국이 조선에 김정일 위원장의 삼남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사실상 '차기'로 거론한 게 적지 않은 의미가 있어 보임.
- 중국은 조선에서 "우리는 조선(북한) 인민들이 노동당을 중심으로 단결해 김정은 동지의 영도하에 슬픔을 힘으로 전환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전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혀 '김정은 지도체제'를 언급했음.
- 중국은 지난해 9월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2인자'로 등장하고서 1년여 노동당과 인민군을 '장악'해왔음에



- 도 공식적인 인정을 삼키왔으며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사실 중국으로선 김정은 지도체제가 하루빨리 공고해지는 걸 바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임. 그러나 김정은이 아직 20대 후반의 나이에 충분한 후계자 수업을 거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당·정·군의 권력을 승계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한동안 북한을 우려스런 눈길로 바라볼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아울러 중국이 조전을 통해 '조선식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언급한 것도 이채로움. 이는 자국 체제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지칭하는 중국이 사회주의라는 공감대 속에서 '북한식'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는 지적임. 조전은 "김정일 동지는 조선식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사업에서 불후의 업적을 쌓았고 옛 지도자들이 손수 구축한 양국의 우의를 부단히 발전시켰다"고 적었음.
 - 중국이 조전에서 "중국 당, 정부, 인민은 비통한 심정으로 그(김정일)를 영원히 그리워할 것" "김정일 동지여 영원하라"는 표현을 넣어 김정일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추모한 점도 의미가 작지 않아 보임. 김일성 주석 사망 때 북한이 수년간 '유훈 통치'를 했고 다소 불안정한 김정은 지도체제 속에서 김정일 유훈 통치가 반복될 것을 고려한 언급이라는 지적임.

● <김정일 사망> 中매체들, 김정은 부각 보도(12/20)

- 중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쩍 부각시키고 있음. 중국 매체들은 20일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그의 삼남인 김정은에 초점을 맞췄음.
-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을 "위대한 계승자"라고 표현했다고 소개했음. 이 매체는 아울러 북한이 김정은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김 위원장 장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사망에 대한 애도가 잇따르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 신정보는 인터넷판에서 김 위원장과 김정은이 지난 9월 9일 평양에서의 건국 63주년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던 모습을 흑백사진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김 위원장 사망 사실과 김정은의 계승을 암시하는 사진을 실었음.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신화통신은 인터넷판에서 전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원 이름으로 북한에 보낸 조전을 머리기사로 실었음.
- 조전은 "우리는 조선(북한) 인민들이 노동당을 중심으로 단결해 김정은 동지의 영도하에 슬픔을 힘으로 전환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전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혀 '김정은 지도체제'를 언급했음.
- 중국은 북한이 2009년 1월부터 후계자 김정은의 정치적 지도체제 구축에 나선 데 이어 2010년 9월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사실상 2인자로 등장했음에도 공식적인



인정을 삼가왔다는 점에서 중국이 조전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 이런 가운데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중국은 과도기의 북한이 기멸 수 있는 후견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정은이 젊다는 점에서 일부 국가들이 앞으로 북한의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적었음.

● <김정일 사망> 환구시보 "中, 北에 외풍 막아줘야"(12/20)

-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20일 "중국이 과도기의 북한에 믿을만한 지지 국가가 돼야 하며 외풍을 막아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국제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중국이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이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음.
- 이 매체는 "일부 국가가 북한의 권력 교체를 지역 전략구조 변화의 계기로 삼고 있는데 반해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아직 젊고 북한이 작은 나라여서 외부의 압력을 감수하고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런 주장을 폈음.
-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로 중국이 고생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북중 우호관계를 공고하게 유지하는 게 중국으로선 동북아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도 했음.
- 환구시보는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라는 상황에 직면해 다른 나라들이 북중 협력관계를 흔드는 걸 내버려둔다면 중국의 이전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면 국익을 해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중국이 북한의 내정에 간섭해선 안 되지만, 그래도 중국이 북한에 가장 영향력 있는 대국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음.
- 환구시보는 이를 위해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적당한 명분을 찾아 서둘러 북한을 방문해 이 같은 특수한 시기에 북한의 새 지도자와 소통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국이 북한의 안정적인 권력 교체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매체는 또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도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미국·일본 등에도 북한의 상황은 물론 그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을 적시에 통보하는 식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구시보는 이와 함께 "중국이 북한의 혼란에 반대하는 태도를 분명히 밝히면서 안정적인 정권교체를 지지해야 북한과 다른 주변국과의 마찰 가능성이 작아진다"며 "북중 우호는 동북아 안정을 유지하는 초석"이라고 역설했음.

● <김정일 사망> 훈춘·투먼 접경지 팽팽한 긴장감(12/20)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발표 이틀째인 20일 북·중 접경지역인



지린(吉林)성의 훈춘(琿春)과 투먼(圖門), 광촨(防川)은 국경 주변에 민간인 접근이 금지되고 경비가 삼엄해지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음.

-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외곽시인 훈춘 시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단둥(丹東)과 함께 북한 사람이 가장 많고 북·중 경제교류도 매우 활발한 지역임.
- 훈춘 시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변경지역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으며 북한 사람과 인터뷰, 주변지역 사진 촬영 등이 금지됐다고 밝혔음.
- 훈춘 시로 들어가려면 거쳐야 하는 조선족자치주의 주도 옌지(延吉)만 해도 북한 식당들이 잠시 영업을 중단했을 뿐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으나 북한과 바로 마주한 변경지역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음. 훈춘 시에는 도로 중간마다 경찰차들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듯했음.
- 북한과 중국에 정통한 소식통은 "중국 공안당국이 변경지역 주변에 경비병력을 크게 늘렸다"면서 "만일의 경우 탈북자들의 집단 이탈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 홍콩 언론들이 전날 북한이 중국으로 통하는 변경지역에 군병력 2천여 명을 배치했다고 보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음.
- 변경 지역에 긴장이 감돌면서 북·중 무역도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소식통들은 현재 북한 사람들이 조문을 위해 귀국하고 있으며 중국으로 나오는 북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 그러나 대부분 중국인은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중국의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톱뉴스로 보도된 탓에 관련 내용을 있었지만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임. 옌지에서 만난 한 중국인 여성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돌아가신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일부는 북한 소식에 아예 무감각했음.
- 이 지역의 한국과 중국 교포들도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망으로 경계를 늦출 수는 없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였음.

● <김정일 사망> 中지도부 집단조문(12/20)

-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20일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을 방문해 집단으로 조의를 표했음.
- 중국중앙(CC)TV 저녁 뉴스 프로그램인 '신원론편(新聞聯播)' 따르면 후 주석과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리창춘(李長春)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당·정·군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이날 오전 북한 대사관을 찾아갔음.
- 이들 4명은 모두 중국 집단지도 체제를 이끄는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기도 함. 권력 서열로 보면 후 주석이 1위, 우 상무위원장이 2위, 리 상무위원장이 5위, 시진핑 부주석이 6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 후 주석 등 지도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영정이 걸린 분향소에서 묵념하고 박명호 공사 등 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나 위로의 말을 건넸



- 음. 후 주석은 "중국 당과 정부는 김정일 동지의 서거에 비통한 심정"이라며 "중국 인민은 조선의 위대한 영도자이자 중국 인민의 친밀한 벗인 그를 영원히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 후 주석은 이어 "우리는 조선 인민이 김정일 동지의 유지를 받들어 조선 노동당을 중심으로 단결해 김정은 동지의 영도 아래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후 주석의 이 같은 발언 내용은 전날 중국 당·정·군 지도부가 북한에 보낸 조전 내용과 거의 같은 것임.
 - 한편, CCTV는 장쩌민(江澤民·85) 전 국가주석도 이날 빈소에 회환을 보냈다는 사실을 함께 전했다.
 - 이날 조문에는 국가 지도자 외에도 귀보슝(郭伯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과 양제츠 외교부장, 링지화(令計劃) 당 중앙서기처 서기 겸 중앙판공청 주임,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 등이 대거 동행했음.
 - 후 주석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 발표 다음날 오전 북한 대사관을 방문해 조문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인 것은 북·중간 우호관계가 매우 공고하다는 점과 함께 중국이 북한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이에 앞서 중국은 김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19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원 등 4개 기관 명의로 조전을 보내 김정은 영도 체제를 인정하고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중국은 김 위원장의 사망 발표 당일 김정은 후계승계를 인정하는 내용의 조전을 발표하고 다음날 후 주석이 조문을 하는 등 김정일의 사망에 따른 북한의 혼란을 막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비교적 빠르게 행동하고 있음.
 - 후 주석이 북한대사관을 찾아 조문함으로써 중국의 나머지 국가 지도자들과 주요 인사들도 대사관을 방문해 조문할 것으로 예상됨.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20일 현재 브루나이 공화국을 방문 중이며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은 20-24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태국 순방을 할 예정임.
 - 외교 담당 국무원 다이빙궈(戴秉國)도 20일 미얀마에서 개최된 제4차 메콩강유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중국 수뇌부들이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대외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나 귀국 후 북한 대사관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

● <김정일 사망> 中누리꾼, 정부와 시각차(12/20)

- 중국 정부는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최고의 애도를 표시하고 있지만 중국 누리꾼들은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 올라온 김 위원장 사망 관련 글들은 중국의 친구가 세상을 떠 안타깝다는 내용도 일부 있지만 북한의 독재정치나 3대 세습 등을 조롱하는 내용이 많아 정부의 공식 태도와는 대조



- 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중국 누리꾼들은 3대 세습에 대해 많은 비난을 쏟아내면서 북한 인민은 이제 스스로 선택할 때가 됐다거나 후계자인 김정은의 능력이나 정국 장악력에 의문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음.
 - 아이디가 쓰루먼하커(子踏門下客)라는 누리꾼은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3대 통치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름은 한 글자씩 같지만 자연법칙에 따라 소질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다"고 3대 세습 체제를 비난했음.
 - 여우푸즈푸(有福之夫)는 북한 시민들이 김정일 사망소식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사진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최소한 더 이상 누구를 향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없어 행복하다"고 조롱하면서 "가족 독재 통치와 학정은 분명히 오래갈 수 없다"고 말했음.
 - 팡진닝(方振寧)이라는 누리꾼은 중국 정부가 보낸 조전에 "김정은 동지 영도 아래"라는 문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은 곧바로 북한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김정은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중국의 피보호국이 아님에도 김정은은 오히려 중국의 피보호인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음.
 - 뤼디(陸地)라는 누리꾼은 "김정일의 사망으로 북한의 역사적 기회를 맞았다. 김정은이 세계 조류에 순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하지만 김정일이 중국의 라이벌인 미국에 맞서왔다는 점을 평가하는 글도 적지 않았음. '적의 적은 친구'라는 입장에서 미국과 대립해온 북한과 김정일을 친구이자 동지로 간주하는 중국인의 정서가 표출된 것으로 풀이됨.
 - 양우링(楊武陵)이란 누리꾼은 "중국에 북한 외에 또 다른 강철 같은 친구가 있는가? 전쟁을 같이 치룬 동지이자 형제가 세상을 떠났는데 애통해 하지 않는다면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음.
 - 한 누리꾼도 "김정일은 북한인민의 위대한 영도자이자 세계최고의 패권 국가와 맞선 사람이었다. 그와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 또 있겠는가"라며 아쉬움을 표시했음.
- <김정일 사망> 中 빠른 대처로 한반도 '기선잡기'(12/21)
- 중국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음.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필두로 수뇌부가 베이징(北京)의 북한대사관을 찾아 단체 조문하는가 하면 중국 외교부는 주변국과 잇따라 접촉하면서 불상사를 방지하려는 '예방외교'에 나선 모습임. 북한에 대한 '후견'을 자처한 형국임.
 - 중국의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은 김 위원장 사망 발표가 있고 다음날인 20일 한국, 일본, 러시아 외교장관과 연달아 전화회담을 했음. 갑작스런 변고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안갯 속에 빠져든 가운데 냉정하게 접근하지는 요지였음.
 -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그런 목표를 위해 협력하자



- 고 역설했음. 물론 여기에는 장례 절차를 진행 중인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어 보임.
- 같은 날 오전 후 주석은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리창춘(李長春)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등 중국 수뇌부와 함께 당·정·군 인사들을 대동하고 북한 대사관에 차려진 김 위원장 조문소를 찾았음.
 - 눈길을 끄는 대목은 후 주석이 이 자리에서 김정은 지도체제를 공식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임. 후 주석은 북한 대사관의 박명호 공사에게 "우리는 조선 인민이 김정일 동지의 유지를 받들어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단결해 김정은 동지의 영도 아래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 후 주석의 이런 발언은 이미 19일 중국이 당·정·군을 망라한 조전에서 김 위원장의 삼남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차기 지도자로 거론하고 20일 류웨이민(劉爲民) 외교부 대변인이 그 같은 입장을 되풀이한 데 이어 나왔음.
 - 이처럼 중국이 '포스트-김정일 체제'로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최고 지도자로 공식화한 게 곳곳에서 감지됨. 발 빠르게 새로운 북·중 관계 정립에 나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짐.
 - 중국 당국이 관영 매체들을 통해 대내적으로 김 위원장 사망에 대한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차기로서 김정은 부위원장을 부각시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함. 중국 내 통신·방송·신문 매체들은 점차 김정은 부위원장에 대한 노출 빈도를 높이면서 북한의 새 지도자로 조명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함.
 - 사실 20대 후반의 나이에 충분한 후계수업을 거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권력을 승계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대내외적인 리더십 확보가 중요한 김정은 부위원장으로선 중국의 전면적인 '후원'이 절실한 상황임.
 - 핵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수년째 고립된 북한으로선 내적 성장 동력이 고갈돼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만이 유일한 생명줄이기 때문임.
 - 중국 역시 김 위원장 사망에 따른 북한 급변사태를 차단하면서 대북 영향력 확대라는 전략적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쓸쓸함. 이런 가운데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0일 김 위원장 사망 이후에도 대북 영향력을 확보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해 중국의 '속내'를 비쳤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의 이런 쟁걸음 대응을 '기선잡기'로 해석하고 있음. 김 위원장 사망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외교·안보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김정은 지도체제를 적극적으로 후원함으로써 대북 영향력을 선점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임.
 - 중국은 최근 북·미 간 접촉에도 적지 않게 신경을 쓰는 기색임. 식량지원에 초점을 맞춘 회담이지만 제3차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고 '뜻만 맞으면' 북미 간 경색이 해소돼 미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새 지도부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 눈에 띄는 가운데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 판짜기가 서서히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김정일 死後> 中, 곧 北에 식량 원조할 듯(12/22)

- 중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장례식 이후 북한에 식량 원조를 할 것으로 알려졌음. 베이징의 한 대북소식통은 22일 "북한이 현재 상중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식량"이라며 "중국이 식량 원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음.
- 이 소식통은 "중국은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많은 양을 제공할 것"이라며 "그러나 관례대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음.
- 중국은 지난 1994년 7월 김일성 북한 주석이 사망하고 나서도 북한에 식량원조를 한 것으로 전해졌음. 중국의 대북 식량 원조는 사실상 1급 비밀로 취급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최근 몇 년 새 북중 우호관계가 돈독해지면서 그 양이 예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관측됨.
- 지난해와 올해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이 이뤄질 때마다 식량 원조도 제공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핵 문제로 수년째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은 이미 내적 성장동력을 상실한 탓에 농업생산 진보가 미진하고 중국의 원조량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상시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임.
- 특히 김 위원장 사망에 따른 추모기간이 13일에 달해 이 기간에 기업소는 물론 시장에서의 상거래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식량 부족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소식통은 "중국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장례식 후 연말연시에 식량원조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조만간 특사 형식으로 고위층을 북한에 보내 조문을 겸해 식량 원조 계획을 전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중국이 외국 조문단을 받지 않겠다는 북한의 방침을 존중해 정부 차원의 조문단이 아닌 공산당 정치국 위원 급(級)의 특사를 보낼 것으로 전망됨.
- 실제 김일성 주석 사후에도 중국은 공산당 정치국 위원과 후보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을 북한에 파견해 당시 장쩌민(江澤民) 국가 주석의 조의를 전달했음.

● <김정일 死後> 中투면개발구 北노동자 취업 허용(12/22)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후에도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큰 영향 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함북 온성군 남양과 마주한 중국 지린(吉林)성 투면(圖門)시 공산당위원회의 류보(劉波) 선전과장은 2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투면경제개발구 안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기업공업원구를 따로 조성했다고 밝혔음.



- 류 과장은 외부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주로 고용한다는 의미에서 '북한공업단지'라는 별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기업공업원구라고 설명하면서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취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동안 투먼개발구가 북한 노동자들의 취업을 허용할 것이라는 소문은 작년 하반기 이후 일부 나왔지만 중국 정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확인 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투먼개발구는 1992년 지린성의 비준을 얻은 후 지지부진하다 지난 8월 20만㎡ 부지에서 공식 착공식을 가졌으며 현재 본부 건물 1동이 완공됐고 공장건물 3개동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음. 향후 10년 뒤 공업생산 규모 300억 위안(5조4천억 위안), 개발구내 인구 2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소식통들에 따르면 투먼시 경제개발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북·중 합자회사인 연변(延邊)금추전자과학기술유한회사는 북한 무역성, 함경북도 해운구락부, 선봉무역회사 등과 북한 근로자의 파견 근무를 위한 노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력이 풍부하지만 북한과 가까운 지린성과 랴오닝(遼寧)성의 국경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새 고임금을 찾아 한국과 일본, 중국의 연안 도시 등으로 취업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을 빚고 있음.
 -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건비가 급등하자 이 지역의 기업체들은 저렴한 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북한 근로자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있으며 경제가 어려운 북한은 이를 외화획득의 호기로 이용하고 있는 것임. 류 과장은 또 투먼개발구에는 한국의 해인전자도 입주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 이에 앞서 투먼시는 지난해 10월 양국 접경지역 주민들이 통행증만으로 자유롭게 출입하며 무관세 교역을 할 수 있는 호시(互市)무역 시장도 개설했음. 투먼 해관(海關) 부근에 마련된 이 시장을 이용하는 양국 주민들은 1인당 8천 위안(134만원) 이하의 상품 판매에 대해 관세가 면제됨.
- <김정일 死後> 中매체, '김정은 시대' 공식화(12/24)
- 중국 매체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북한에 '김정은 시대'가 열렸다고 공식화하고 있음.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24일 "북한이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 진입했으며 국제여론이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 중국신문사는 이미 북한의 관영 매체들이 김정은 부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호칭하고 있고 서방의 주요 언론도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시대가 시작됐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 중국신문사는 그러면서 김정은 부위원장이 20일에 이어 23일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참배했으며 조문이 여전히 줄을 잇고 있다고 덧붙였다.



- 관영 신화통신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지난 22일 '김정일 유혼 준수' 사설을 게재한 것을 계기로 북한에서 유혼 통치가 시작됐다고 보도하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김정일 사망> 日, 긴급 안전보장회의 소집(12/19)

-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음.
- NHK 방송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노다 총리와 이치카와 야스오(一川保夫) 방위상 등 외교안보 관련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후 1시 안전보장회의를 열었음. 일본의 안전보장회의는 국방에 관한 중요 사항과 중대한 긴급사태의 대처 방안을 논의함.
- 일본은 김 국방위원장의 구체적 사망 경위와 김 위원장 사후의 북한 정세, 후계 구도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일본 외무성은 한국, 미국 등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북한의 상황전개 파악에 총력을 쏟고 있음.

● <김정일 사망> 日총리, 긴급 경계태세 지시(12/19)

-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 긴급 경계태세를 내각에 지시했음.
- 교도통신에 의하면 노다 총리는 김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19일 오후 1시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관계 각료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경계·경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음.
- 노다 총리는 정보 수집 태세의 강화, 한국 미국 중국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만전의 경계태세 등을 내각에 주문했음.
- 노다 총리는 이날 낮 도쿄시내에서 소비세 인상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가두 연설을 할 예정이었으나, 연설장으로 향하던 도중 김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급거 총리 관저로 복귀했음.
-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의 위기관리센터에 김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관련한 대책실을 설치했음. 외무성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이 미국 방문 중이어서 사무차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음.
- 외무성의 한 간부는 "김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2012년으로 예상됐던 김정은으로 권력이양이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반도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의 비상시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음.

● <김정일 사망> 日, 北피랍자 문제에 촉각(12/20)

- 일본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 정세가 불투명해지자 북한에 납치돼 살고 있는 일본인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일본



- 은 납치를 주도했던 당사자인 김 국방위원장이 사망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음.
- 20일 NHK방송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언론에 의하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다음주로 예정된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정상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줄도록 요청하기로 했음.
 - 노다 총리는 19일 밤 기자들에게 "납치피해자 여러분이 한시라도 빨리 일본에 돌아오도록 할 방침이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피랍자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보수집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음.
 -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수단이 유효한지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납치문제대책본부 및 관련 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음.
 - 외무성 내에서는 북한의 새로운 정권이 권력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납치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군부와 치안기관을 자극하는 일을 하기 어려워 납치자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의 통치체제에 변화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납치자 문제 해결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음.
 - 마이니치신문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일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강성대국'의 실현을 위해 일본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강력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북한 관계자가 최근 일본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일본이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 북한은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일본 총리가 방북했을 때 일본인 납치 사실을 시인했고, 이후 7명을 돌려보냈음. 하지만 일본은 12명의 추가 소재 파악과 귀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양국간 대화는 2008년 8월 선양(瀋陽) 실무 협의에서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에 합의한 이후 단절됐음.

● <김정일 死後> 日정부, 공식 조의 표시않기로(12/22)

- 일본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 북한에 공식적으로 조의를 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22일 이 통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조의를 표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
- 그는 지난 19일 김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직후 열린 임시 회견에서 "갑작스러운 서거 소식을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던 것은 무슨 의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본 문화의 일반적인 상식 범주로(정부 입장이 아닌) 제 개인적으로 애도의 뜻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음.
- 일본은 1994년 7월 김일성 북한 주석이 사망했을 때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사회당위원장'의 명의로 조선노동당에 "위대한 지도자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을 갖고 마음으로부터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조전을 보낸 바 있음.



● <김정일 死後> 日, 조선총련 조문 방북 불허(12/23)

- 일본 정부가 제일 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의 방북을 불허하기로 했음. 23일 현지언론에 의하면 일본의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조선총련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장례식 참석을 위해 허종만 부의장 등의 방북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김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정책을 바꿀 특단의 사정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 이는 조선총련이 북한에 입국할 경우 일본으로의 재입국이 금지된 허 부의장 등 간부 6명에 대해 재입국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임. 산케이신문은 22일 조선총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례식을 앞두고 일본에 만경봉호의 재입항과 허종만 조선총련 부의장 등의 방북 허용을 타진했다고 보도했었음.
-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실험을 한 2006년부터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 수입금지, 송금제한, 조선총련 허 부의장 등 간부 6명의 재입금 금지 등의 제재를 취하고 있음.

● <김정일 死後> 日, 탈북난민 유입 대응책 검토(12/25)

- 일본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탈북 난민이 유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대응책 검토를 시작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24일(현지시간) 밝혔음.
- 이들은 일본 중앙정부가 니가타(新潟), 이시카와(石川), 후쿠오카(福岡) 현 등 동해에 인접한 지방정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음. 이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후 권력 과도기에 북한이 불안정해지면 탈북 난민 수용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력을 얻기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됨.
- 일본은 또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철수와 수송에 미군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임. 2009년 10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2만8천320명임.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지난 19일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음.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에 특이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1994년 김일성 북한 주석이 사망했을 때 긴급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총리 시절인 1996년에는 북한 난민 대응과 관련한 긴급 매뉴얼을 작성한 바 있음.
- 이에 따르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북한 난민 문제를 다루는 공동 본부를 설치해 쉽터를 마련하고 난민 지위를 결정함. 난민으로 결정되면 일본에 일시 체재하거나 제3국으로 출국하는 방안 중 선택을 하게 됨.
-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한국어 통역자를 확보하는 한편 자연재해에 대비한 식료품과 일상용품을 난민에게 제공할 지도 검토하게 된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중앙 정부는 난민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지방 정부의 협조를 먼저 구해야 함.



-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적자에게 자발적인 귀국을 촉구할 계획이지만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면 미군에게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덧붙였음. 이는 일본과 미국이 한국에서 자국민 철수를 위한 상호 양해각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임.

마. 러·북 관계

● 러시아 "북핵 합의·3각 협력사업 이행 희망"(12/23)

- 러시아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어도 북핵 합의와 함께 러시아와 남북한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가 이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알렉산드르 루카세비치 외교부 대변인이 22일(현지시간) 밝혔음.
- 루카세비치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한반도 북핵 문제 조정과 러시아와 남북한이 참여하는 경제협력 프로젝트 실현 등 이전에 이루어진 양자 및 다자 합의가 모든 이해 당사국에 의해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루카세비치 대변인은 "입수되는 정보에 따르면 북한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기기관과 산업, 교통, 통신 등이 정상 체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여러 곳에서 추모 행사가 치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우리는 북한과 한반도 전체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기를 바란다"며 "최근 이루어진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접촉 결과 이들도 비슷한 입장 이었다"고 강조했다.
- 루카세비치는 이어 "지난 19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국가장례위원회의 김정은 앞으로 조전을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와 관련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으며 앞으로도 양자 협력과 한반도 평화 및 안정 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 루카세비치는 또 2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모스크바 북한 대사관에 차려진 조문소를 방문해 조문록에 글을 남겼다고 덧붙였음.
- 앞서 김 위원장 사망 발표 당일인 19일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와 선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사망이 양국 우호관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러시아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빅토르 이사예프도 김 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에게 보낸 조전에서 "김 위원장은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교역관계와 공동투자프로젝트 실현, 과학기술 및 문화 협력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지적했음.
- 러시아 철도 당국인 철도공사 사장 블라디미르 야쿠닌도 22일 러시아와 북한을 연결하는 하산-나진 구간 철도 개보수 (2차) 공사와 나진항 현대화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음.



● 러 대외정보국장 "北, 군사도발 안할 것"(12/25)

- 북한의 지도부가 군사적 도발을 통해 역내 안정을 저해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미하일 프라드코프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을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이에 따르면 프라드코프 국장은 이날 러시아 극동지역에 방송된 한 TV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심각한 우려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내가 보기에 북한 지도부는 지금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음.
- 러시아의 대외정보국은 옛 소련 KGB(국가안보위원회)의 후신으로 대외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푸틴 정권 시절 총리를 역임하기도 했던 프라드코프 국장은 지난 5월 북한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식량 지원과 경협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었음.

바. 기 타

● <김정일 사망> 北 유엔대표부 20일 분향소 설치(12/20)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대사 신선호)는 이르면 20일(이하 현지시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분향소를 설치해 조문객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유엔 고위 당국자는 19일 연합뉴스에 "북한대표부가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조문객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에도 각국 외교관들의 조문이 이뤄졌다"고 말했음. 분향소가 설치될 장소에 대해서는 "아마도 북한대표부 건물 내부가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 그러나 다른 당국자는 "대표부 건물이 규모나 시설 등에서 외부 조문객을 받을 정도는 못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제3의 장소가 모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와 별도로 일부 친북단체도 자체적으로 분향소를 마련해 조문객을 맞을 것으로 예상됨.
- 북한대표부 직원들은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히룻밤이 지난 이날 외부 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음.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접한 지 한 시간쯤 지난 전날 밤 11시께 대표부 건물에 들어갔던 신 대사는 이날 새벽 잠시 나왔다가 아침 8시께 다시 대표부로 들어간 뒤 두문불출하고 있음.
- 전날 자정이 조금 지나 대표부에 들어갔던 다른 직원과 가족들은 이후 바깥나들이를 하지 않고 있으며, 숙식도 건물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다만 이동일 차석대사 등 2명은 이날 오전 대표부 건물을 빠져나와 바쁜 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했다. 이후 북한 주민으로 보이는 여성 2명이 대표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목격됐음. 이 차석대사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음.
- 북한대표부는 맨해튼 유엔본부 맞은편의 '외교관 센터' 빌딩 13층에 입주해 있음. 유엔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 대표부에는 외부에서 고용된 사



람은 단 한명도 없으며, 전화를 받거나 타이핑 등의 사무보조 업무는 대표부 직원의 부인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이날도 북한대표부 건물의 경비원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방문자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건물 앞에서는 한국과 일본 기자 20여명이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음.

● <김정일 死後> 국제사회 北3대세습 공식화 분위기(12/22)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전에 아들 김정은으로의 권력 3대 세습을 비판하거나 백안시했던 국제사회가 김 위원장의 사망 후부터 이를 공식 또는 사실상 인정하는 견해를 속속 내놓고 있음.
-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2009년 1월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권력 3대 세습을 '공산왕조' 건설이란 부정적 눈길로 줄곧 바라봤음.
- 북한의 최대 '후견국'인 중국조차 김 위원장 본인과 북측의 끈질긴 요청에도 김정은이 평양 최고지도자의 후계로 정해진 데 대해 기간 묵시적 인정을 보인 바 있으나 최근까지 권력 최상층부의 공식적 'OK' 신호를 주지 않았음.
- 그러나 지난 19일 북한이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을 발표한 직후부터 상황은 급반전했음. 그가 살아 있을 때 끝내 제대로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자신의 사망 후 하루아침에 달성되는 아이러니한 양상임.
- 김정은으로의 최고 권력 이양에 관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나라는 역시 북한과 혈맹임을 자랑해온 중국임. 중국은 김정일의 사망 소식이 나온 당일 오후 곧바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원 등 당·정·군의 핵심 4개 기관 명의의 조전을 북한으로 보냈음.
- 조선에서 중국은 김정일의 사망을 애도하고 북중 양국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과 정부의 일관된 방침임을 천명했음.
- 이튿날인 20일 오전에는 국가주석 후진타오(胡錦濤)가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리창춘(李長春)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당·정·군 고위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북한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조문했음.
- 후 주석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조선 인민이 김정일 동지의 유지를 받들어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단결해 김정은 동지의 영도 아래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함으로써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임을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음.
- 중국의 이 같은 신속한 행보는 김정일의 급사로 최고 권력이 공백상태에 빠질 경우 우려되는 북한 내 대규모 혼란을 막으면서 자국 이익에 기초해 최대 동맹국으로서의 강력한 지원을 과시하려는 조치로 풀이됨.
- 핵개발과 문제로 북한과 늘 갈등 관계를 유지해온 미국도 김정일의 사망 발표가 나오자 당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성명을 내 "북한 주민



- 들의 안녕을 깊이 우려하며 어려운 시 주민들에게 염려와 기도를 보낸다"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 이를 뒤인 21일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일은 김정은을 공식 후계자로 지명했고 현 시점에서 변화가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면서 김정은의 후계 세습을 사실상 공식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음.
 - 이를 전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 직후부터 막연하게 '북한의 새 리더십(new leadership)'으로 써오던 표현에서 크게 나가 김정은의 이름을 처음으로 직접 거명하며 그가 북한의 지도자임을 백악관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셈임.
 - 이밖에 러시아와 일본 등 한반도 주변 다른 열강도 김정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인정은 없었지만 고위 관리들의 말로 미뤄볼 때 그의 권력 승계를 불가피하나마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대비에 나서는 분위기임.
 - 일본 외무성 한 간부는 지난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2012년으로 예상됐던 김정은으로 권력이양이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반도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의 비상시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러시아도 같은 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명의로 김정은에게 직접 조전을 보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심심한 조의를 표했음.
 -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이날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사망이 양국 우호관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변함없는 양국 간 우의를 희망했음.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에 대한 세계 주요국이 이 같은 입장 변화는 김정일이 누구도 예측 못한 때 갑자기 숨졌고 그에 따른 북한 내 돌발적 상황 급변이 북한과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도 이롭지 못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임.
 -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사해 북한에 권력 공백이 온 상황에서 내부로부터 차기 지도자로 공식 추대됐고 군부 통제 등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은 현실적으로 그의 아들인 김정은 부위원장밖에 없다"면서 국제사회의 3대 세습에 대한 입장 변화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음.
 - 유 교수는 그러나 "김정은의 면면이나 능력 등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는 데다 북한이 산적한 현안을 안고 있어 향후 북한 내에서의 상황 전개에 따라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앞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김정일 사망> 한미 외교장관 "긴밀공조가 중요"(12/19)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9일 밤 10시부터 15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한미 공조방안을 협의했음.
- 두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1차적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클린턴 장관은 "한미 양측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동맹국으로서 공조를 계속해나가자"고 말했다.

● <김정일 사망> 한미 국방, '신중' 대처키로(12/20)

- 미국은 19일(현지시간)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군에 특이 동향은 없으며 주한미군의 경계 태세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음.
- 조지 리틀 미 국방부 대변인은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과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이 이날 오전 전화 통화를 가졌다면 이같이 전했다.
- 이날 통화에서 두 장관은 한반도 안보태세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신중(prudent)함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리틀 대변인은 말했다.
- 그는 "패네타 장관은 김 장관에게 한반도 안정과 동맹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공약을 확인했다"면서 "패네타 장관은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 미국은 대한민국과 함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 그는 "두 장관은 지금이 민감한 때이며 북한에서의 상황 전개를 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정일 사후 평소와 다른 북한군의 움직임은 없다"면서 "계속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리비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패네타 장관은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 소재 자신의 집에서 한반도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음.
- 이에 앞서 독일을 방문 중인 마틴 텀프시 미 합참의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에게 경보를 줄 만한 북한 측의 행동 변화는 목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텀프시 의장은 김정일 사후 북한의 권력승계에 우려를 갖고 있지만 주한미군의 경계 태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 그는 또 한미 양국 지도자들이 김정일 사망 이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음. 그는 "그(김정은)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게 나의 예상"이라면서 "나는 그가 이런 자리를 맡기에는 어리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그가 실제 후계자가 되는지, 또 이전에 그가 다루지 않았던 많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리틀 대변인은 템프시 의장과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도 각각 한국측 카운터파트와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나. 한·중 관계

● <김정일 사망> 한중 정상 전화통화 '불통'(12/20)

-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주변 4강(強) 가운데 미국, 러시아, 일본 정상과는 전화통화를 했으나 아직까지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는 통화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후 주석은 이날 오전 북한 공관을 방문해 김 위원장의 사망에 조의를 표한 것으로 밝혀져, 남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우리 정부의 대중외교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음.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이날 상임위 질의에서 "이 대통령이 19일 오후 2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오후 2시50분 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오후 4시30분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 "그러나 후 주석과는 오늘 오전까지 통화하지 못 했다는게 사실이나"고 물었음.
- 이에 대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답변에서 "한중 양국 간에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체제가 달라서 그런 것으로 본다"면서 "중국과는 협의하고 있으며 한중간에 해외 전화통화는 익숙하지 않아 그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국 정상간 일정조정의 문제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한국과 중국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조 대변인은 이어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아직까지 중국 정상이 다른 나라 정상과 통화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면서 "오늘 양국 외교장관 통화에서 현 상황에 대한 인식도 공유했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소통과 협의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 정부는 이날 낮 12시 김성환 외교장관과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간 전화통화를 통해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입장을 확인하고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공조를 꾀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정상간의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앞으로 전개될 불가측한 정세 속에서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꾀하는데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는 특히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이 중국 선장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으로 국민들의 대 중국 정서가 크게 나빠진 가운데 발생한 것이어서 향후 한중관계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후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조의를 표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에 대해 상이한 접근을 피하는 이중적 행태에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남한과 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정치·외교적으로는 북한과의 혈맹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한국 정상과의 통화에 주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그러나 이 같은 대중외교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현 국면에서 대북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과의 최고위급 외교채널이 적기에 가동되지 않을 경우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음.

● 한·중 내주 전략대화.. '김정은 체제' 논의(12/23)

- 한·중 양국이 오는 27일께 서울에서 고위급 전략대화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략대화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이후 양국이 소통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내적 우려 속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향후 한반도 정세운용 방향에 대해 양국이 공통의 상황인식과 대응기조를 조율해낼 수 있을 지 주목됨.
- 정부 고위당국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양국이 고위급 전략대화를 한다면 김정일 사후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 실무협의 중이며 일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내주 중으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 전략대화에는 박석환 외교통상부 1차관과 장즈준(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양국 외교부의 지역·기능국 관계자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외교의 2인자로 꼽히는 장 부부장은 중국 공산당 대외협력부 부부장을 9년 재임한 핵심 당 간부 출신으로 영국유학 후 30여 년간 대미관계와 대미 정책연구를 담당해온 '미국통'임. 현재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베트남·태국 순방을 수행 중임.
- 전략대화는 2008년 8월 한·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매년 개최되는 것으로 이번이 네 번째임. 전략대화는 통상 특정현안을 논의하기 보다는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방안과 한반도 관련 협력방안을 놓고 포괄적 협의를 진행하는 회의임.
- 그러나 시점상 김정일 사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양국은 또 외교현안으로 떠오른 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양국은 내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다. 한·일 관계

● <위안부 충돌' 韓日 앞으로도 곳곳 지뢰밭>(12/19)

- 한일 양국 정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충돌한 가운데 앞으로도 여러 전선에서 후속 갈등이 예고돼 있어 현해탄의 파고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 외교가에서는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동해표기 문제, 강제징용 보상문제 등 4대 이슈가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 지뢰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이 중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가 맞물리면서 뜨거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임. 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해결 요구에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맞불을 놓는 전략을 택했는데 앞으로도 일본이 이런 식의 접근법을 자주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에서임.
- 우리 정부는 일본이 계속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자협의를 거부하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르면 내달께 양국간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는 방침인데 일본이 독도 문제도 중재로 풀자고 역제안을 하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일본은 그동안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 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ICJ) 중재절차에 부칠 것을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는 우리 고유영토로 응할 이유가 없다"며 무시해왔는데 위안부 중재위 문제를 계기로 이를 공론화할 수 있다는 것임.
- ICJ나 위안부 중재위 모두 양측 동의가 없으면 진행될 수는 없지만, 국민 정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이슈가 같이 터지면 휘발성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게 외교가의 관측임.
-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일본이 영토문제라고 주장하는 독도 문제에 비해 전쟁범죄, 여성, 인권 등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가 다르다"면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독도를 꺼내 들면 국제적으로 창피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내년 4월말 국제수로기구(IHO) 총회를 앞두고 실무그룹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해의 영문 표기 문제도 한일간 전선의 한 축임. 이 문제는 총회를 앞두고 실무그룹 보고서를 올려야 하는 내년 3월 전후로 큰 이슈로 부각할 전망이다. 양국은 최근 실무차원의 협의를 한 차례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음.
- 민간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보상문제는 표면화하지는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한일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임. 일본측 전범기업 등을 상대로 민간 차원에서 진행됐던 보상 요구가 정부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에서임.
-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한일간 외교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日언론 "李대통령 위안부 발언, 생각보다 쏘다"(12/19)

-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데 대해 일본 언론은 "상상했던 것보다 발언 강도가 쏘다"고 놀라워했음.
- 도쿄신문은 19일 "(이명박)대통령이 역사 문제에서 강경 자세를 보인 것은 일본 측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 이었다"고 전했다.
- 이 신문은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시에 성숙한 한일관계를 지향하겠다고 선언했고, 올해 10월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대국적인 수준의 대화가 오갈 것'이라고 예상했고, 위안부 문제는 주요 테마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측은 회담 전) 준비 모임에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꺼낼 수 있다고 보고 미리 복수의 응답 요령을 검토했다"고 전한 뒤 "대통령의 발언은 예상한 것 중에서도 가장 쏘다"는 '총리 주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 아사히신문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회담 후 총리 보좌관이 나 비서관 등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가 나오리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음.
- 이 신문은 일본 정부 내부에서 "회담 전 외무성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지적과 "겐바 고이치로 외상은 도대체 무엇을 한 거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예상보다 강한 것이었다"며 "'과거사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은 한국이 정권 말기라는 의미"라고 비난했음.

● 李대통령, 노다 日총리와 통화.. "긴밀 협력"(12/19)

-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긴급 전화통화를 통해 앞으로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음.
- 이 대통령과 노다 총리는 오후 2시50분께 전화 통화에서 앞으로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긴밀히 정보를 교환하는 등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김정일 사망> 한일 외교장관 통화.. 공조다짐(12/20)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은 20일 오후 8시45분부터 15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음.
- 김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겐바 외상은 "한·미·일 공조 아래 중·러와도 협력,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동의했음.



- 앞서 김 장관은 19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이날 낮에는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과 각각 통화하고 긴밀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음.

라. 미·중 관계

● <김정일 사망> 美中 '상황 안정적 관리'에 방점(12/20)

-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의 외교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상황의 불안정성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동북아 정세의 '뇌관'으로 떠오른 형국이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주변 4강은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동북아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컨센서스' 속에서 전략적 협력의 틀을 모색하고 북한을 상대로는 '관리적 개입'을 시도하려는 흐름이 읽힘. 각국이 북한에 대해 '조의표시'를 이미 했거나 검토 중인 이면에는 이 같은 전략적 포석이 자리함.
- 특히 '포스트 김정일' 체제가 어떤 식으로 기락을 잡느냐는 각국의 외교적 이해와 전략설정과 직결된 이슈임. 협력의 흐름 속에서도 동북아 외교지형의 새 판짜기를 둘러싼 물밑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음.
- 무엇보다도 한반도 주변질서를 좌우하는 양대 축인 미·중이 어떤 방향 설정을 하느냐가 정세의 풍향계임. 그동안 지역안보 패권을 둘러싸고 갈등구도를 형성해온 미·중이지만 김정일 사망 이후 '전략적 관리'에 초점을 두고 전략적 협력을 피하는 흐름이 읽힘.
- 이는 미·중이 올 1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2005년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강조됐던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합의한 기초의 연장선임.
- 미국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을 겨냥해 대북 대응기조를 '전략적 관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음.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북한의 내부체제가 안정화되는 게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19일 미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북한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전환(transition)'을 원한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과 개선된 관계를 희망한다는 뜻을 거듭 밝힌다"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미국이 '조의표명'을 검토 중인 것도 마찬가지임.
- 물론 이를 두고 김정은 후계체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기는 힘들지만 미국도 현 국면에서 김정은 체제로의 승계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분석임.
- 북한의 최대 후견국인 중국은 새로운 '김정은 체제'를 지지하며 북한내부의 체제 안정을 유도하고 있음. 중국 당·정·군 지도부가 전날 조전을 보내며 김 부위원장의 영도 체제를 인정한 것도 이런 차원임.
- 여기에는 한반도 상황 안정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넘어 북한에 대한 큰 틀의 중장기적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음.
- 미·중의 전략적 협력 흐름은 새로운 권력 중심축으로 떠오른 김정은



- 체제에 우호적 대외환경을 조성하며 내부 정비에도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이 같은 대외환경은 김정일은 체제가 김정일 애도기간과 곧 이를 '강성대국' 축하기간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유혼 통치'를 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북한 내부의 체제정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돌출변수가 생길 경우 미·중의 전략적 흐름이 깨지면서 북한 체제의 향방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과 긴장이 고조될 수 있음.
 - 러시아와 일본도 미·중의 이 같은 전략적 협력흐름에 가세하고 있음.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해온 러시아는 19일 북한에 조전을 보내고 양국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나섰음. 일본도 19일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을 통해 서둘러 애도의 뜻을 표했음.
 - 이 같은 주변 4강의 움직임 속에서 동북아 안보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6자회담이 내년 초 일정시점에서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북한 김정은 체제로서는 일단 내부 정비에 주력하면서도 대외적으로 '정당성'을 과시하기 위해 6자회담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차분한 대응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김정일 사망 이후의 불안정한 정세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외교의 이니셔티브를 쥐는 '기회의 창'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다 유연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마. 미·중 관계

● 日 "이란産 원유 수입 중단 않겠다"(12/20)

- 일본은 19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은 이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회담한 뒤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된다면 세계 경제 전체가 타격받을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앞서 미국 의회는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법안을 통과시켰음.
- 이는 이란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원유 대금 결제를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한국, 일본 등의 우려를 낳았음. 일본은 원유 수입의 10% 정도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음.
- 우방국인 미국과 의견 차이를 보이는 일이 드물었던 일본은 이날 이동유과 관련 협약을 놓고도 미국과 대립했다.
- 클린턴 장관은 일본에 부모 한쪽이 다른 쪽의 동의 없이 외국으로 자녀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이동납치 민간 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을 촉구했음.
- 일본은 G8(주요 8개국) 국가 중 유일하게 이 협약의 비준을 거부하고 있으며 미국인 부모가 일본에 있는 자녀를 되찾으려고 제기한 소송이 120건 이상 진행 중임.



바. 중·일 관계

● 日, 중국 국채 100억 달러 매입 추진(12/20)

- 일본이 중국의 국채 100억 달러어치를 사들일 방침이라고 현지언론이 20일 보도했음. 아사히신문 등에 의하면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25~26일 열리는 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 국채를 사들이는 방안에 대해 합의할 예정임.
- 이는 일본이 미국 국채 일변도의 외화 자산 운용에서 탈피해 위험을 분산하고 중국 위안화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것임.
- 일본은 현재 외환보유액이 1조3천47억 달러이며 대부분을 미국 국채에 운용하고 있음. 일본은 이 자금의 일부를 털어 중국이 발행하는 국채를 단계적으로 100억 달러어치까지 사들인다는 방침임.
- 중국은 단기채를 중심으로 일본 국채를 활발히 사들이고 있으며, 일본도 중국 위안화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음.
-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각의에서 2조5천345억 엔의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음.

● "中日, 해난구조협정 체결 합의"(12/24)

- 중국과 일본이 조난한 선박 승선자를 구조하는 해난구조협정에 합의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일중 해상수색·구조협정' 체결에 정식 합의하기로 했음.
- 이 협정은 양국 주변 해역에서 선박이 조난한 경우 수색과 구조활동에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임. 일본은 한국, 미국, 러시아 등과는 해난구조협정을 맺었지만 중국과는 체결하지 않았음.
- 양국은 하지만 조난 시 구조, 보호해야 할 대상을 '승선자'에 국한했으며, '선박'은 포함하지 않았음. 일본이 한국 등과 체결한 협정은 선박도 보호 대상에 포함돼 있음.
- 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양국 간 주요 갈등 현안인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 개발을 위한 조약 교섭의 재개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중국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본과 중국은 작년 9월 센카쿠열도 선박 충돌 이후 중단됐던 해군 교류를 재개했음. 일본 해상자위대는 호위함 '키리시메'호가 5일간에 걸친 중국 산둥(山東) 칭다오(靑島) 방문과 중국 해군과의 통신훈련 등을 마치고 23일 귀환했다고 밝혔음.
- 일본 호위함의 중국 방문은 2007년 국방 교류 사업의 하나로 시작됐으나 작년 센카쿠 선박 충돌 사건 이후 중단됐었음.



● 日총리 訪中... '포스트 김정일' 논의(12/25)

- 중국과 일본 정상이 만나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한반도 평화 문제를 협의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6자회담 참가국 정상이 만나 양자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전용기를 타고 25일 베이징에 도착했음. 노다 총리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중국 지도부를 만나 한반도 안정 유지를 위한 해법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임.
- 노다 총리는 이날 일본 하네다(羽田) 공항에서 출발에 앞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음. 노다 총리는 이날 오후 원 총리와 회담하고 26일 오전 후 주석과 우 위원장을 만날 계획임.
- 특히 이번 중일 정상회담은 후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의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견해가 구체적으로 표출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음. 중일 정상은 김 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의 안정 유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 조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노다 총리의 방중은 작년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충돌 이후 악화한 중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음. 또한 일본에서 2009년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이후 총리의 중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임.
-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내년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앞두고 전략적 호혜관계를 심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됨. 이 밖에도 양국 지도자들은 상호 국채 매입,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조난 선박 승선자 구조를 위한 해난구조협정 등도 논의할 예정임.
- 중국 또한 노다 총리의 방중을 통해 냉각된 양국 관계를 정상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임.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偉民) 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노다 총리의 방문을 고도로 중시한다"며 "양국이 상호 신뢰를 높이고 중일 간 전략적 호혜 관계를 새 높여 끌어올리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사. 기 타

● <김정일 사망> 日 "韓美와 삼각 고위회담 추진"(12/20)

- 한국, 미국, 일본이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논의하는 3자간 고위급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가 20일 밝혔음.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일본 관방장관은 북핵 6자 회담 재개에 앞서 한, 미, 일이 함께하는 '콘클라베(비밀회의)'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음.
- 이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북핵 6자 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했다고 후지무라 장관은 전했다.



- 음. 후지무라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먼저 일본, 미국, 한국이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할 것 같다"며 "시점을 못박을 수는 없지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백악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오바마 대통령이 노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노다 총리에게 말했으며, 두 정상은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전날 김정일 사망 발표 후 몇 시간 안에 오바마 대통령과 긴급 전화 통화를 갖고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했음.
 - 한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9일(워싱턴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반도를 평화, 번영, 지속적 안보의 새 시대로 인도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북한이 협력한다면, 미국은 주민 생활 개선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 中, 한국 등 4국 대사에 "北 자극 말라" 당부(12/25)

- 중국 외교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당일 한국 등 4개국 대사를 불러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일본 언론이 25일 보도했음.
- 교도통신과 NHK방송 등에 의하면 중국 외교부의 장즈쥘(張志軍) 상무 부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발표된 19일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대사를 개별적으로 외교부로 불렀음.
- 장 부부장은 4국 대사들에게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일 뿐 아니라 각국에도 이익이라면서 한반도 안정 확보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음.
- 중국이 '전략적 이익'을 언급한 것은 김정은으로의 평화적 권력승계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원하겠다는 결의 표명으로 해석됨.
- 중국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 4국 대사에 직접 협력을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임. 이는 중국이 북한의 불안정을 강하게 우려해 한국과 미국을 견제하고 6자회담 참여국에 북한을 자극하는 언동을 삼가 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장 부부장은 "북한 내부는 안정돼 있다"고 강조하고, 김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실은 북한의 공식발표로 알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음.
- 한편 탕자쉬안 전 외교부장은 지난 20일 중국을 방문한 일본 자민당의 히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정조회장에게 한반도의 안정은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이익과 관심이라면서 "불안정은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